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계

인쇄/1998년 2월 16일
발행/1998년 2월 19일

발행처/민족통일연구원
발행인/정세현
편집인/북한연구실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5 팩시밀리 901-2542

ⓒ 민족통일연구원, 1997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한국경제서적 : 737-7498

ISBN 89-87509-30-3 5,000원

연구보고서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계

정 영 태

민족통일연구원

요 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북한 인민군이 단순히 외부 적에 대한 국가방위 차원을 넘어서 권력유지 및 확대라는 정치적 목표를 지닌 특수 무력수단으로 인식 되어왔기 때문에 북한은 자연히 군사우선 정책에 입각한 대규모의 군사력 유지를 필요로 해왔다. 대규모 군사력 유지는 경제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북한경제의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경제의 침체는 군사력의 유지나 발전에 필요한 경제력의 결핍으로 귀결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됨으로써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게 되어 체제까지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북한의 '국방 딜렘마'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 지도부가 이러한 '국방 딜렘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국방계획을 수립·시행해 왔는가를 분석·평가했다.

1.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요인

북한의 국방계획은 지형과 기후 등의 자연조건에 상당히 영향을 입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일성은 군사전략 구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한반도의 지형을 꼽았다. 김일성은 전략·전술면에서 구소련이나 중국의 것을 모방하면서도 한반도의 특수지형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을 상당히 강조했다. 또한 북한은 기상 및 기후조건을 고려한 전술개발 노력의 일환으로 동계작전이라든가 내한훈련을 강화했다.

북한 국방계획의 또 다른 결정 요인으로 그들의 경제적 상황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은 작은 국가에 불과하며 약소국의 경제규모 수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군사기술 장비면에서 선진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북한은 이러한 제한적 경제요인을 감안하면서 이를 최대한 극복할 수 있는 독특한 국방계획 수립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북한이 추구한 국방우선정책은 그들의 총체적 경제력 저하를 초래했고, 이는 또다시 군사력 증강계획을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외화부족은 북한의 새로운 무기획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치적 요인 역시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북한의 군사력 건설은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군사력은 정권이 수립되기 이전에 무력을 통한 북한공산체제 확립의 기초로서 발전했다. 이는 북한군대가 실질적으로 당의 장악과 적화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을 시사한다. 이에 더하여 북한의 군사력은 한반도를 완전히 공산화하기 위한 적화통일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북한의 국방계획은 이러한 대남적화 공격전략을 위한 강력한 군사력 건설에 초점이 맞추어져 온 것으로 파악된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북한의 국방계획에 영향을 준 또 다른 정치적 요인이다. 주체사상은 북한 군사력 증강 방향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논리를 제공했다. 주체사상의 핵심개념은 '자주'다. 북한은 수사상으로 '자주'를 고양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자주국방이란 개념이 강조되어 왔다.

대외적 요인으로 한·미군사 연합과 대 중·소관계를 들 수 있다. 북한은 대남무력통일을 당면목표로 하고 있으며, 군사태세 역시 한국에 대한 자주적인 공격능력의 확보를 추구하는 것이다. 북한의 과도한 군비증강 중심의 국방계획은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을 차단하고자 하는 대응적 노력에서 기인한 바 크다.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받는 단순한 위협뿐만 아니라 강대국인 미국의 위협(군

사개입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해 온 것 같다. 또한 북한은 동맹국가인 구소련·중국의 직간접적인 군사적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북한은 사회주의 강대국의 영향력 차단 또는 최소화를 위해서도 독자적인 군사행동 능력 확보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북한은 약소국으로서 강대국 개입을 억제할 수 있는 국방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2.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계의 특성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은 거의 대부분 김일성·김정일의 명령과 지도에 의해서 독점되어 왔다. 군사관련 당·정의 최고수위기관인 당중앙군사위원회나 국방위원회가 있지만, 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끌어나가는 것도 김일성·김정일 父子 자신이다. 국방계획결정과정에 있어서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총참모부, 작전국 등을 포함한 여타 주요 군사기구를 지휘하고 있는 인물들이 모두 당중앙군사위원회나 국방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독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다만 이들은 이 위원회를 통한 '집체적 결정'에 참가하고 있을 뿐이며, 이 또한 김부자의 명령과 지도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 과정상 드러나는 몇가지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군사관련 계획결정 전과정을 통해서 당의 통제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밑으로부터 계획서 작성 초기단계부터 초급당위원회와의 토론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총정치국장의 합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당의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은 '합의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인민무력부 실무부서에서 계획이 작성되고 토론된 것을 작전국 → 총정치국 또는 총참모부 → 인민무력부 → 최고사령관 순과 같이 수직적 계선상으로 전달되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작전국,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장의 합의를 거쳐 이를 작전국 2처에서 직접 최고사령관인 김정일에게 보고·결정되는 '합의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군사관련 주요 기구들은 상하개념의 수직적 계선조직들이라기보다는 수평적 계선조직이라 할 수 있다.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작전국 등은 상하개념의 수직적 조직이 아니라 각각 고유의 권한과 역할을 지닌 수평적 조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북한의 주요 국방계획은 수령과 당으로 통칭되고 있는 김일성, 김정일에 의해 거의 독점적으로 결정된다.

3. 북한의 주요 국방계획

북한의 국방계획은 김일성·김정일의 군사지도 명령 및 방침, 군사사상, 군사전략·전술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계획까지 수립·결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김부자, 특히 김일성의 북한 자연조건,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및 남한으로까지 정권확대를 위한 정치적 목표, 그리고 대외적 위협에 대한 인식이 북한의 국방계획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평가된다. 김일성의 한반도 특수지형과 기후를 고려한 전략·전술이나, 소국이 지닌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고슴도치형' 군사방어계획, 대남무력적화통일의 정치적 목표 달성과 주변 강대국(미·일과 중·소사회주의 강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 억제 또는 정치적 독립성을 견지하기 위한 '자주적' 국방건설 계

획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의 주요 국방계획인 운용계획, 획득계획, 배치계획, 선언적 계획들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첫째, 북한은 김일성의 대남무력적화통일이라는 정치적 목표 달성과 주변 강대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 또는 정치적 독립성 견지라는 차원에서 '소국 대 소국형'이 아니라 '소국 대 강대국형'의 군사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해 왔다. 북한의 군사참여비율(MPR)을 극대화한 大兵主義, 핵무기, 생화학무기 및 중장거리 미사일과 같은 전략무기개발, 전시형국가관리체제를 상시적으로 운영·유지하는 전쟁준비성,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소모전을 피하기 위한 게릴라전과 같은 전격적이고 단기적인 전략·전술 등은 그들의 '소국 대 강대국형' 운용계획의 실체라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무기획득 기조는 김일성 주체사상의 군사적 표현인 자위노선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군사과학·기술을 '자주화'하는 데 있다. 따라서 북한은 군사우선이라는 개발전략을 추진해 오면서 낙후된 자체기술의 한계속에서도 이를 효과적으로 전력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동시에 북한은 낙후된 기술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부 군사기술을 조속히 도입·모방하고 흡수함으로써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무기자주화를 달성했다. 또한 북한은 무기수출 전략을 강화해서 硬貨를 벌어들임으로써 외국으로부터 필요한 대체무기 또는 부품을 구매하는 데 적극 활용해 왔다.

셋째, 북한의 군사배치계획은 직접적인 대남공격태세를 위한 전방지역 전진배치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억지하기 위한 중·장거리 전략무기 배치로 특징지워진다. 북한은 비무장지대를 광범위한 지하시설물로 요새화해 놓았으며, 지상군의 65% 이상을 평양과 비무장지대 사이에 배치해 놓고 있다. 해군은 동서해안을 방어하면서 남한에 대한 기습공격 지원태세를 갖추고 있다. 군사장비나 군수산업시설은 대

부분 지하화해서 보호되고 있다. 폭격기, 대공방어장비 및 지대공 미사일 등은 대공방어 또는 공격을 위해 배치되어 있다. 이같이 북한의 군사배치계획은 한편으로는 남한과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남기습공격 감행을 용이하도록 하는 기본원칙하에 수행되온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은 SCUD의 증강배치 준비와 함께 노동 1호 미사일의 작전배치를 준비해 옴으로써 대미·일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전략을 지속시키고 있다.

넷째, 선언적 차원에서 북한은 김일성의 '제국주의 침략' 억지를 위한 '자위의 방침'이라는 명목하에 과도한 군사대비태세를 구축해 오면서 동시에 군비축소 및 비핵평화주의를 포함하는 '평화주의' 주장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이중정책을 구사해 오고 있다. 북한은 남침을 위한 과도한 무력건설이라는 대내외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과도한 군사적 동원체제 유지를 통한 체제 공고화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미·일 제국주의 또는 군국주의'의 위협에 대비한 방어적 군사계획을 강조해 왔으며, 이에 더하여 비핵지대 평화지대 창설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 반전, 반핵, 평화옹호운동 등을 고조시킴으로써 북한의 공격적인 군사정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시키고자 했다.

그런데 북한의 이러한 '소국 대 강대국형' 국방계획 추진이 지나치게 오래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북한은 식량난을 비롯한 총체적인 경제난을 자초하게 되었다. 특히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그동안 북한이 제한적으로나마 의존해 왔던 공산권으로부터의 지원 또는 원조가 중단되는 상황에 처함으로써 그들의 경제난은 더욱 심화되었다. 향후 중·단기적으로 북한이 이러한 경제난에서 벗어나기에는 상당한 난관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 정권을 승계한 김정일이 막대한 경제력 집중을 필요로 하는 '소국 대 강대국형' 국방계획을 취소하거나 완전히 변화시킬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황장엽과 김덕홍의 진술에 따르면, 김정일은 "조국통일의 주력은 군대다. 믿을 것은 군대 뿐이다. 모든 힘을 다해 군대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수시 하달해 왔다고 전해진다. 이를 감안할 때 향후 김정일의 군사력에 대한 의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김정일은 경제난이라는 엄연한 현실에 처해있는 만큼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북한은 새로운 군사장비를 건설·보강하는 것보다 기존의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군사운용계획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그들의 높은 군사참여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치·사상적 훈련강화와 함께 비용이 덜드는 모의훈련을 증가시켜 나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북한은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을 위해 군사기술·과학을 발전시켜 새로운 무기획득을 위한 계획을 꾸준히 추구해 나갈 것이지만, 이것 역시 경제력의 저하로 '저경비, 고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는 무기개발에 집중될 것이다. 북한은 우선적으로 주체사상에 의거하여 낙후된 자체기술의 효과적인 전력화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

동시에 향후 경제력을 바탕으로 성능이 더 좋은 무기를 생산하거나 구입할 능력을 지닌 남한에 대한 군사력의 열세 가능성을 모면하기 위해서 북한은 자신의 군사력을 외교적으로나 심리 전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 획득노력을 강화하려 들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은 미사일을 비롯한 전략무기 개발에 있어서는 남한을 앞지르면서 상당한 정도의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들은 대미일 군사외교를 위해서 중요한 지렛대로 사용될 수 있는 효용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언제든지 한국과 미국에 핵공갈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 조차도 갖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지렛대를 수단으로 해서 의도적으로 비합리적인 군사행태를 보이거나, 테러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호전성을 시위함으

로써 그들의 외교·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려 할 것이다. 즉 북한은 의도적인 '비합리성'(irrationality)의 행태를 적절하게 구사함으로써 한·미 군사 동맹의 약화를 기도하거나 한·미연합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해 나가고자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 향후 군사적 테러활동, 남한 영역에 대한 군사적 침범, 미사일 및 화생무기위협, 핵공갈 등과 같은 전략을 보다 활성화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북한은 이같은 공세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존에 유지해 왔던 군사력의 전방지역 전진배치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발간된 한국의 「국방백서」는 북한의 지상군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방지역 내 주요 도시와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 170mm 자주포와 240mm방사포를 계속 생산·배치함으로써 현재 전방지역에 170mm 자주포 350여문과 240mm방사포 250여문이 각각 추가배치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바, 이는 북한의 전방지역 배치강화 의지를 잘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향후 북한은 선언적 차원에서 주한미군 철수요구와 함께 남북한 군축을 더욱 강력히 주장하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현재 처해있는 경제난은 그들의 실질적인 군사력 건설을 제한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반면 남한은 비교우위에 있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능가하는 군비증강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조만간 북한이 남북한의 군비경쟁에서 열세를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남한의 군비증강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실질적인 남북한 군축주장을 펴고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김정일 정권하에서 남북한이 신뢰를 구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군축주장은 대남심리전술 차원의 '평화공세'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결국 김정일 체제하의 북한은 김일성 생존때와 마찬가지로 군사적

수단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체제유지 방안을 고수하게 될 것인 바, 북한의 공세적 국방계획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 목 차 -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방법 및 분석틀 3

Ⅱ.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요인 7
1. 대내적 요인 7
2. 대외적 요인 19

Ⅲ.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계의 특성 24
1. 국방계획 결정 및 집행기구 24
2. 국방계획 결정과정의 특성 32

Ⅳ. 북한의 주요 국방계획 37
1. 운용계획 38
2. 획득계획 54
3. 배치계획 71
4. 선언적 계획 74

Ⅴ. 결 론 81

참고문헌 87

I. 서 론

1. 연구배경

오늘날 악화일로에 있는 북한의 경제난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기인된 것이지만, 국방과 경제의 竝進政策(좀 더 엄격히 말하면 국방우선정책)에 따른 과도한 군사비 투자가 주된 요인의 하나라고 평가되고 있다. 국방의 필요에 의해 지출된 과다한 군사비가 다른 국가목표의 하나인 경제적 번영을 제한했고, 나아가 체제 자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방우선주의에 입각한 군비증강과 공세적 군사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심각한 식량부족을 겪고 있으면서도 군량미 비축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군장비 현대화를 비롯한 군비증강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1] 이러한 현상은 북한 지도부가 군사적 수단 확보를 체제유지 또는 확장의 관건이라 인식한데서 빚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김일성은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수단을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권력 공고화와 유지과정에 있어서도 군사적 수단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다. 권력장악 초창기부터 김일성은 구소련군의 엄호를 받으면서 '자위대,' '적위대'를 조직하고 무장시키는 데서 출발하여 '보안대,' '보안간부 훈련부대,' '인민군'으로 발전시키면서 군을 북한공산체제 확립의 기초수단으로 삼아왔다.

---

1) 최근에 발간된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식량, 연료부족 등 경제난 심화에도 불구하고 전쟁수행능력 보강과 전투준비태세 강화를 지속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SCUD의 증강배치준비 및 노동1호 미사일의 작전배치 준비 외에도 소형잠수함과 공기 부양정 추가 건조, MI계열 신형 헬기 도입, AN 2기 추가생산 등과 같은 북한의 군사력 보강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군사훈련활동에 있어서도 계속적인 증가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7~1998」 (서울: 국방부, 1997), pp. 57~58.

또한 권력강화와 유지라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김일성은 군대를 적극 활용했다. 김일성의 궁극적인 정치적 목적의 하나가 바로 '남조선 해방'이라 할 수 있으며, 북한 인민군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독려되어 왔다. 김일성은 남조선 해방을 위해서 정치적 투쟁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무엇보다도 '완전한' 남조선 해방을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김일성은 "인민군대의 장래임무는 공화국남반부를 해방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면서 "군대라는 것은 언제든지 당에서 부를 때…언제든지 떨쳐나설수 있도록 준비되여 있어야"하며 "이때에 무기가 정비되지 않았소, 간부가 모자라오, 준비가 되지 않았소 하면서 어물어물하여서는 안될"것이라 했다.[2] 따라서 북한이 오늘날까지 인민군을 '혁명의 군대'로 강조해오고 있는 것 역시 북한군대가 한반도 전역에 걸친 김일성의 정권확장을 의미하는 '대남무력혁명'의 군사적 도구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김일성은 인민군의 조직·사상적 강화, 군사기술의 과학화, 현대화 및 군의 대집단화 등을 추진하였다. 이는 1960년대 초반 전인민 무장화, 전국토 요새화, 전군 간부화 및 전군 현대화라는 4대 군사노선으로 집약되었다. 동시에 김일성은 인민군을 수령인 자신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종속적이며 복종적인 특수집단으로 만들어 나갔던 것이다.

그 결과 북한군대는 단순히 외부적에 대한 국가방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유지라는 목표를 가진 특수 무력수단이 되어 왔기 때문에 북한은 자연히 군사우선 정책에 입각한 대단위 군사력 건설을 필요로

2) 김일성, "인민군대의 간부화와 군종, 병종의 발전전망에 대하여(발취), (1954.12.23)," 김일성,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p. 123.

해왔다. 대단위 군사력 건설은 경제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북한경제의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경제의 침체는 군사력의 유지나 발전에 필요한 경제력의 결핍으로 귀결되며, 동시에 주민들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됨으로써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어 체제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북한의 '국방 딜렘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북한 지도부는 이러한 '국방 딜렘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국방계획을 수립·시행해 왔으며 향후의 국방계획은 어떠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체계적(systematic)인 관점에서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에 영향을 미쳐온 주요인들과, 국방계획의 결정구조와 특성을 분석하고, 실제로 시행되어 온 주요 국방계획의 실체를 분석·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분석틀

국방계획(defense planning)은 국가안보정책(national security policy), 국방정책(defense policy), 전략(strategy), 전술(tactics)개념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 개념들이 뚜렷한 구별없이 자유롭게 혼용되어온 경향이 짙다. 국가안보정책은 국방정책의 상위개념으로서 가장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다. 국가안보 개념은 한 국가가 국내외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국가목표와 국가이익을 보호·확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비해 국방정책은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나 행위들로부터 국가와 시민을 군사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일컫는다. 따라서 국방정책은 주로 군사적 문제에 초점을 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국방계획은 국방정책을 실행하는 계획이나 결정들을 지칭한다. 즉 국방정책은 한 국가의 광범위한 군사적

목표를 결정하고 위협인식을 밝히는 것인 반면, 국방계획은 적의 위협을 저지하거나 적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군사력의 조직(organization)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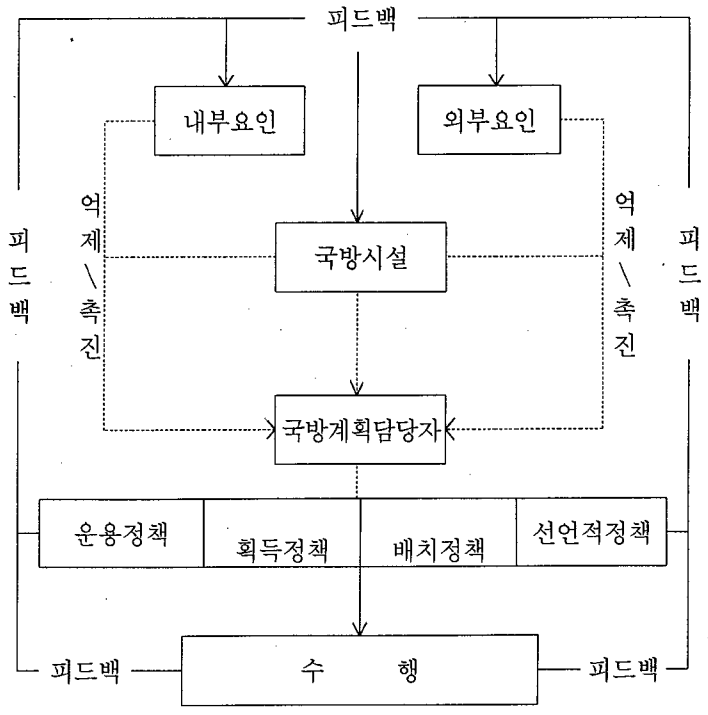
국방계획은 분석의 편의상 크게 4가지 계획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운용(Employment)계획, 획득(Acquisition)계획, 배치(Deployment)계획, 선언적(Declaratory)계획 등이 그것이다. 운용계획은 한 국가가 전쟁을 준비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인력이나 재원을 어떠한 계획하에 운용하는가를, 획득계획은 군사적 목적으로 무엇을 해외로부터 들여 오거나 자체 조달해 왔는가를, 배치계획은 전쟁 또는 평화시를 위하여 군사적 인원과 재원들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가를, 그리고 선언적 계획은 정부가 국방계획 또는 국방정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밝히고 있는가를 각각 의미한다.[3)]

그런데 이같은 국방계획과 관련된 세부계획들은 나름대로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어떠한 무기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한다거나 인적·물적 자원의 배치 결정을 하게 될 경우 이것이 대내외적 환경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되거나 대내외적 환경에 역으로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따라서 북한의 국방계획을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기 위해 외교정책 결정과정 분석에 응용되고 있는 체계적(systematic)분석방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노이만에 의하면, 국방정책은 외교정책과 마찬가지로 국가안보정책의 아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교정책 분석기법을 이용하는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유용하다고 했다. 노이만은 국방계획 결정에 대한 국내외적 영향 개념도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도표

3) Stephanie G. Neuman, "Defense Planning in Less-Industrialized States: An Organizing Framework," Stephanie G. Neuman, ed., *Defense Planning in Less-Industrialized States* (Massachusetts: Massachusetts Lexington Books, 1984), pp. 6~8.

1> 참조).

<도표 1> 국방계획의 대내외적 영향 개념도



출처: Neuman, "Defense Planning in Less-Industrialized States: An Organizing Framework," p. 5.

위의 개념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투입(inputs)부문과 산출(outputs)부문으로 나누고, 투입부문에서는 대내적 영향요인과 대외적 영향요

인, 국방계획결정체계의 특성을, 산출부문에서는 국방계획의 주요 세 부계획(운용, 배치, 획득, 선언적 계획)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런데 본 연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한계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는 산출부문에 해당하는 국방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투입부문과의 유기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결정 구조에 있어서 어디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어떻게 그것을 결정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지 체계적 분석틀을 이용해서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 메카니즘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북한 국방계획의 특성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제고하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Ⅱ.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요인

1. 대내적 요인

가. 자연조건: 지형과 기후

자연환경, 특히 지형과 기후 및 기상 등이 일국의 전쟁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예를 들면 국가의 해안은 전략적 자산(해상접근, 세계무역, 어업자원)이면서도 이를 보호할 강력한 해군의 유지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군사적 부담이기도 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장거리 국경선은 우호적인 주변의 무역 파트너와 전쟁시 동맹국을 제공해주기도 하지만 적대적 인근국가에 대비해서는 광범위한 군사력 건설을 요구한다. 기후 및 기상은 일정한 형의 군사장비를 획득하도록 한다.

북한 국방계획의 경우 지형과 기후 등의 자연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일성은 군사전략 구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한반도의 지형을 꼽았다. 김일성은 전략·전술면에서 구소련이나 중국의 것을 모방하면서도 한반도의 특수지형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을 상당히 강조했다. 김일성은 "우리 나라는 산과 강 하천이 많고 해안선이 긴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지형적 조건을 잘 리용하여 산악전과 야간전투를 잘하고 대부대 작전, 정규전과 유격전을 옳게 배합하면 비록 최신 군사기술로 발톱까지 무장한 적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격멸할 수 있는 것"[4]임을 역설함으로써 한국의 자

4)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70.11.2)," 「김일성저작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p. 294.

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전략전술[5] 개발 노력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외에도 북한의 국방계획이 자연과 지리적 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사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면 북한은 해안선이 동서로 양분되어 있어서 해안공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지리적으로 불리한 점을 고려해서 각각 30명의 병력을 운반할 수 있는 특수한 수륙양용 및 해상수송용 함정들을 집중 건조했다. 북한은 이러한 해군력으로 수 개 사단을 신속히 도하시킬 수 있는 새로운 특수 도하 장비와 더불어 결정적인 해상 공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6] 또한 북한은 전국토를 난공불락의 진지로 만들기 위하여 4대 군사노선의 하나로 「전국토의 요새화」를 추진했다. 전국토의 요새화란 전쟁에 대비해서 북한전역을 자연 지리적 조건에 알맞게 방호시설을 설치하고 축성하여 문자 그대로 전지역에 군사요새를 구축한다는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역시 김일성이 산이 많은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살린 국방계획 결과 중의 하나이다.[7]

한국 戰場의 지리적 특징 역시 북한군대의 조직과 편성에 영향을

---

5) 김일성은 6.25 전쟁시 소련 전술을 교조적으로 모방해서 패전했다고 주장하면서 6.25 남침경험과 우리나라의 지형과 기상을 고려한 실정에 맞는 전술연구에 중점을 두고 이른바, 주체적인 전술개발을 강화해 왔다. 한국지형과 기상을 고려한 전술개발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많은 산악: 산악전, 야간전투, 유격전, 갱도전술, 무기의 경량화; 긴해안선: 상륙작전, 해상침투; 많은 하천: 수영훈련, 도하작전, 우회기동, 공중기동; 습지: 장애물 극복대책; 추운 겨울: 동계작전, 내한훈련 등. 서원식, 「북한전략사상신론」 (서울: 도서출판 한원, 1990), pp. 125~126.

6) 이종학, "북한의 군사정책과 전략," 박웅서 외, 「북한군사정책론」 (서울: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1983), p. 384.

7) 김일성은 "조국해방전쟁의 경험은 우리나라에 산이 많은 것이 진지를 요새화하는 데 아주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온 나라의 가는 곳마다 튼튼한 방어 시설들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김일성,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4년 2월 27일," 「김일성저작집 1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257.

미친 것이 사실이다.[8] 험준한 산악지대가 비무장 지대(DMZ)를 가로지르고 있으며, 장갑차를 선두로 한 남하 공격로가 3개에 불과하다. 남한의 경제적 전략적 심장부인 수도 서울이 비무장지대로부터 불과 40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縱深防禦와 전술적 후퇴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특수 지형에 대비해서 북한은 제8특수군단을 장갑차가 통과할 수 없는 산악지대의 후방에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훈련했고, 동시에 공군과 수륙양용舟艇을 이용하여 공격하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북한은 초기 공격시 2,500명의 병력을 공수할 수 있는 AN-2기 수송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해상침투용 여러 특수함정들을 건조해 왔는가 하면, 3개 사단을 신속히 침투시킬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외곽지형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중·러와 육지로 연결된 경계선을 보유하고 있다. 1961년 쌍무적으로 각각 체결된 북·중 및 북·소 군사동맹관계는 북한이 중국과 구소련의 적대적인 군사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국방계획 수립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그러나 구소련의 붕괴로 북·러 군사동맹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중국과의 동맹관계는 변함없이 존속해 오고 있으나 중국의 적극적인 개혁·개방 여파가 북한체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북한은 북·러, 북·중 국경선을 단속할 국방계획의 필요성이 새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북한이 탈북자들을 막기 위해서 북·중 국경선을 수비할 국경 수비대의 증강 명령을 내린 것은 바로 이러한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기상 및 기후가 군사전략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북한지역의 경우, 강우량이 많은 6~8월은 범람하는 대하천 등이 도보

8) 이종학, "북한의 군사정책과 전략," p. 216.

및 기계화부대 기동에 제한을, 그리고 동계적설이 혹한도보 및 기계화 부대에 제한을 주는 것은 물론 병참선 유지에도 영향을 초래하고 전투근무지원면에서는 연료, 피복, 탄약 등 보급품의 증가 및 수송에 지장을 가져온다.

북한지역은 대륙의 동해안에 위치해 있어서 겨울에는 대륙에서 발달하는 한랭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일 위도의 다른 나라에 비하여 몹씨 춥고 그 기간이 길어서 일일 최저기온이 영하 이하의 일수가 남부지역이라도 4개월이나 되며 북부 내륙지방에는 6개월이 넘는다. 전반적으로 대륙성 기후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동계는 고지 정상기온이 영하 35도를 하회하고 돌풍과 1,000mm 정도의 강설은 일반적 현상이다. 그리고 여름을 제외한 타계절에는 심한 한발을 겪을 때가 많은 반면 여름에는 홍수의 피해가 심하다. 북한은 이같은 기상 및 기후조건을 고려한 전술개발 노력의 일환으로 동계작전이라든가 내한훈련을 강화했다.

나. 경제적 요인

한 국가의 경제적 자원은 군사목적을 수행하는 계획결정의 직접적인 요인 중 하나다. 즉 경제적 수준 여하에 따라 군사목적 수행계획의 방향과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작은 국가에 불과하며 약소국의 경제규모 수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군사기술 장비면에서 선진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다.[9] 따라서

9) 이같은 관점에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우리 나라는 작은 나라이며 갓 발전된 나라입니다. 내놓고 말하여 우리는 군사기술장비면에서 발전된 나라들과 경쟁을 할 수 없으며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쟁의 운명은 결코 그 어떤 현대적 무기나 군사기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1970.11.2)," 「김일성저작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p. 473.

북한은 이러한 제한적 경제상황을 감안하면서 이를 최대한 극복할 수 있는 독특한 국방계획 수립에 초점을 맞추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무장투쟁을 비롯한 군사행동의 일반적인 합법칙성은 나라와 민족이 각이한 조건에 따라 특수성을 띠고 나타난다. 우리나라와 같은 산과 강하천이 많고 해안선이 긴 나라와 넓은 평원을 가진 큰 나라의 전법이 꼭 같을 수 없으며 작은 나라와 큰나라, 발전된 나라와 덜 발전된 나라의 군사장비가 일률적인 것으로 될 수 없다. 따라서 국방건설과 군사활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어디까지나 자기머리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자기실정에 맞게 해결하여야 한다."[10]

여기에서 북한은 小國이 지닌 제한된 인적·물적자원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창조적'인 군사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제한적 경제상황은 그들의 군사전략전술을 수립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국방건설 방향설정에 미친 영향력은 지대하다.

'4대 군사노선'으로 집약되는 북한의 국방건설 지침은 소국으로서의 북한이 자체의 제한된 경제상황을 잘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대군사노선은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를 지칭한다.[11] 전인민의 무장화라는 것은 정규군인 인민

10) 방문권·허종호 공저, 「자주시대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4: 혁명무력의 위대한 령도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8), p. 15.

11) 북한의 4대군사노선은 경제력이 약한 소국이 강대국의 공격에 대비하는 소위 '고슴도치 방어전략'에 해당되는 것이다. 실제로 김일성은 '고슴도치 방어전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전체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무들이 고슴도치를 보았을 것입니다. 고슴도치란 놈은 머리를 쑥 들여밀고 몸을 슬쩍 구부리면 온몸이 가시로 덮입니다. 그놈은 이처럼 ≪무장력≫이 새기 때문에 어떤 짐승도 감히 달려들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체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해놓으면 아무리 강대한 적도 함부로 접어들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놈도 접어들지 못합니다." 김일성, "우리 인민군대를 혁명군대로 만들며 국방에서

군대는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 계급을 정치 사상적으로 훈련하고 동시에 군사기술적으로도 훈련하여 적합한 무기를 공급함으로써 전주민을 군사목적 수행을 위한 자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전국민의 개병주의를 의미하는 전인민의 무장화는 군사장비의 열세를 인적 군사자원으로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북한은 정규군 외에도 노농적위대, 교도대, 붉은청년근위대 등을 발전된 전투병력 단위로 구성시킴으로써 인적 자원을 전쟁목적에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토의 요새화는 군사장비의 열세를 보완해 주는 또 다른 군사건설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大國인 미국이라는 잠재적 적과 군사장비 발전 경쟁을 벌일 자원과 능력을 결핍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한 상호간의 무력 충돌시 미국의 확고한 개입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군사 강대국인 미국의 공격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인식해온 것 같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막대한 경제력을 요하는 미국과의 군사장비개발 경쟁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공격에 대한 방어체계 구축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지하시설물 설치, 군사기지와 주요 산업시설 요새화 등을 강화하는 군사정책이 바로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전군의 간부화를 통하여 사단은 군단으로, 연대는 사단으로, 대대는 연대로 늘릴 수 있게 한 북한의 군사계획 역시 제한된 경제투자자원하에서 막대한 군병력을 유지해 나가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경제적 대가의 지불을 피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보인다. 즉 전군장병에게 한등급 높인 장교훈련을 시켜놓음으로써 일단 유사시에

자위의 방침을 관철하자(발취) (1963.10.5)," 「김일성저작집 1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446.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군대의 수를 대폭적으로 팽창시킬 수 있게 되어 평화시에 대규모의 군사를 상시 유지하는 데 드는 경제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12]

북한은 전군 현대화를 통해서 제한된 경제여건 내에서 최대한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북한은 전군이 최신무기 및 과학적 전투기술의 습득을 통하여 작전자체를 과학화하고 기술화함으로써 작전수행 방법을 교조적인 공론 또는 이론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적 지형과 실정에 맞는 작전을 세워 이에 필요한 가장 적합한 무기와 전투기술을 스스로 개발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각종장비와 훈련을 보급·실시하고자 했다.[13] 즉 북한은 선진대국과는 달리 현대적 무기와 기자재 생산에 있어서 경제적 한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자체의 현대적 무기와 기자재를 가지고도 그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과학기술개발과 작전 및 훈련을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북한은 제한된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국방과 경제 어느 한 쪽을 희생시키지 않고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경제·국방병진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김일성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은 나라의 정치적 역량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물질적 기초이며 국방건설은 경제건설의 안전을 확고히 보장하고 그 성과를 튼튼히 보위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따라서 경제건설을 잘하지 않고서는 정치적 역량도 국방력도 강화할 수 없으며 또 국방력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원수들의 침공으로부터 혁

12) 북한의 전군 간부화정책은 김일성 고유의 착상이라기 보다 1차대전 이후 연맹국에게 패한 독일이 베르사이유 조약에 의하여 군대의 숫자를 제한받게 되자 히틀러 지배하에 2차대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독일은 전군의 장병을 사전에 장교훈련을 시켜 놓음으로써 일단 유사시 병력을 단기간에 대폭적으로 팽창시켜 유용하게 쓰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박웅서, "북한의 군사정책과 경제: 북한의 경제력과 군사목적 수행능력," 박웅서 외, 「북한군사정책론」, p. 63.

13) 위의 논문, pp. 63~64.

명의 전취물을 보위할 수 없다"[14]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국방력을 강화하기는 하되 일반경제 건설(특히 중공업 중심)의 기초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은 상호 배타적 목표가 아님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북한은 "자본주의하에서 군수공업이 공업부문 구조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의 군사화가 촉진되고 있다"고 하면서 "자본주의하에서 군수공업은 민수공업의 발전을 저해하며 나라의 경제를 기형화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빈궁화를 촉진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자기모순을 더욱 더 첨예화시킨다"[15]고 비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군수공업 중심의 공업화 육성으로 북한의 공업화는 경제의 기형화를 자초하고 말았다. 우선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의 하나로 중공업 우선의 공업화가 추진되었다. 북한은 소위 '주체적 공업화'를 목적으로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공업'에 해당하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외국으로부터 기계·시설재를 수입하지 않고 확대 재생산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고 하였다. 소위 '주체적 공업화'를 이룩할 목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962년 12월 당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경제·국방병진노선을 제기하면서 중공업을 군사력 증강의 일환으로서 병기생산 위주로 개발해 나갔다. 비록 경제발전과 군사력 증강이라는 병진정책이 표방되기는 했으나 북한의 경제발전의 수준으로 필요한 무기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경제건설이라는 목표를 희생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가 "인민경제 발전에

14) 김일성, "국가활동의 모든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1967.12.16)," 「김일성저작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p. 354.

15) 사회과학출판사 편,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98.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국방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적"[16]함으로써 '先 국방력 강화'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북한의 군수공업은 전반적으로 낙후된 산업기술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4대군사노선'에 따라 경제·국방병진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한 1960년대 후반기에는 군사비의 과대한 지출로 인하여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5.5%로 크게 하락했다가 197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 10.4%(1971~1975)를 기록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이후 북한 경제는 연평균 경제 성장률 2~4%로 침체를 보이기 시작하여 특히 1990년대 들어와서는 지금까지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오고 있다.[17] 1993년 기준 북한의 GNP는 205억 달러로 한국 GNP(3,492억 달러)의 약 16%에 불과하다.[18] 1990년 기준 북한의 대외무역은 1988년에 사상최고치인 52억 달러를 기록한 후 계속 하강 추세를 보여 왔으며, 1994년 대외무역 총액이 21억 1천만 달러의 소규모 수준에 머물렀다.[19] 북한의 무역이 소규모인 것은 그들의 대내 지향적 공업화 전략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규모 상태의 무역은 자연히 외화부족을 야기시켰다. 결국 이같은 북한의 총체적 경제력 저하는 궁극적으로 군사력 증강계획을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외화부족은 북한의 새로운 무기획득을 어렵게 하고 있다.

---

16)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63」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3), p. 159.

17) U.S. CIA,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8); 1986~1992년은 통일원, 「남북한 경제지표」 (1993); 한국은행, 「1993년 북한 GNP 추정결과」 (1994)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한 남궁영 박사의 판단임. 남궁영, "남북한 경제력 비교연구," 「통일연구논총」, 제2권 제2호 (1993), pp. 190~194.

18)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 경제지표 편람」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 33.

19)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서울: 통계청, 1995), p. 101.

다. 정치적 요인

북한군사력 건설은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기택 교수는 북한의 공식적인 권력이 확립되기 전에 이미 북한의 군사력이 수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이는 북한군사력이 기원에서부터 정치적 성격을 띤 것이라 지적하였다.[20] 북한 군사는 당초부터 '반소주의' 혹은 '반동분자'를 탄압하거나 정권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력 형성이 그 첫째 목표라고 한다. 즉 북한지역내의 공산화를 통한 정권 구축을 위해서 군사적 수단이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북한 인민군의 형성 초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하자 곧 소련군의 엄호하에 국내파 공산당원들은 공산당 조직의 착수와 함께 '치안유지'라는 명목으로 '자위대'와 '적위대'를 조직하였고, 이들 '자위대'와 '적위대'를 무장시키기 시작했다. 이어 '자위대'와 '적위대'가 해체되고 난후 '보안대'가 조직되었는데, '보안대'는 완전히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들로 구성되었다. 그 후 1946년 8월 15일 해방 1주년을 맞이하면서 평양에다 '보안간부 훈련대 부대'를 창설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이것이 인민군 창설이었던 것이다. 총병력이 7,000~8,000명이었고 이들이 인민군의 간부로 부임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의 군사력은 정권이 수립되기 이전에 무력을 통한 북한공산체제 확립의 기초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는 북한군대가 실질적으로 당의 장악과 적화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을 시사한다.

이에 더하여 북한의 군사력은 한반도를 완전히 공산화하기 위한 '민주기지'의 강화 수단으로서 남으로부터의 방어목적과 동시에 남북한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목적을 위해서 이용되어 왔다. 북한은

---

20) 이기택, "북한군사정책과 정치," 박응서 외, 「북한군사정책론」, pp. 3~14 참조.

대남적화통일을 북한인민의 최대임무로 상정하여 왔다. 북한은 당면 목표의 하나로 남한을 포함한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해방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면서 그들의 대남적화통일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최초의 대남군사적 적화목표 실현을 위한 군사적 행위가 북한의 6.25전쟁 도발이었다. 이는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실패로 끝났지만, 이후 북한은 정치·경제적 경쟁과 군사적 테러 및 군비증강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옴으로써 대남 군사적 공세전략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의 국방계획은 이러한 대남적화 공격전략을 위한 강력한 군사력 건설에 초점이 맞추어져 온 것으로 파악된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북한의 국방계획에 영향을 준 또 다른 정치적 요인이다. 주체사상은 북한 군사력 증강 방향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논거를 제공했다. 1967년 12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회의에서 발표한 공화국 정부 정강과 1970년 제5차 당대회를 통해 주체사상이 북한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으로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가 기본노선으로 되었다.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모든 부문에 걸쳐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나라의 정치적 자주성을 공고히 하고 우리 민족의 완전한 통일독립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자체의 힘으로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할 수 있도록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할 것"[21]이라 천명했다.

특히 북한은 "한나라의 경제적 자립과 정치적 독립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한 주체사상의 실천"[22]이라고 함으로

21) 김일성,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1967.12.16)," 「김일성저작집 2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488.

써 군사적 방위능력은 다른 영역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며 모든 정책 결정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그들의 주체성은 자주국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자주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한국가가 스스로 방어할 힘이 없는 나라는 발언권이 없다. 만일 한국가가 국가방위를 다른국가에 의존한다면 그 국가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며 자유로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게 된다. 지각있는 자는 누구나 현재 국제정치 분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서 이러한 경우를 쉽사리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23]

이렇게 볼 때, 주체사상의 핵심개념은 '자주'라 할 수 있다. 북한은 修辭上으로 '자주'를 고양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4대군사노선은 '자주'의 구체적인 군사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자주'를 위한 국방력 건설 계획은 일차적으로 남한을 포함한 대외적 군사적 위협에 대한 방위수단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전사회의 병영화를 통한 사회통제 및 국제적인 발언권 증대를 위한 물리적 수단 측면에서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

22) Chang Ha Kim, *The Immortal Juche Idea* (Pyongyang: Korean Workers' Party Press, 1987) p. 324.

23) Ibid., p. 325.

2. 대외적 요인

가. 한·미연합 군사적 위협 가능성

북한은 대남무력통일을 당면목표로 해 왔으며, 군사적 태세 역시 한국에 대한 自主的인 공격능력의 확보를 추구해 왔다. 6.25전쟁 경험과 그 이후 지속된 크고 작은 규모의 북한 무장테러로 인하여 한국내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인식이 팽배하게 되었다. 한국은 그동안 북한의 이데올로기 자체가 무력혁명을 기본노선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군사력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비하는 군사적 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와 같이 남북한간의 軍備競爭을 자극한 궁극적인 주체는 북한이나, 한국은 이에 반응하는 방어자의 입장에서 군비를 증강해 왔고, 이것이 또다시 북한의 軍備增强을 자극함으로써 남북한의 군비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의 과도한 군비증강 중심의 국방계획은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의도 외에도 駐韓美軍을 비롯한 미국의 對한반도 군사개입을 차단하고자 하는 대응적 노력에서 기인한 바 크다.

북한은 한·미상호방위조약(1953.10)뿐만 아니라 미·일안전협정(1960.1)에 의해서 군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완전히 포위되어 왔다. 사실상 미·일협정은 한국의 안전이 일본의 안전에 필수적이라는 원칙에 기반을 둔 한국관련 조항[24]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축된 한·

24) 동 조약 제4조에 "일본국의 안전과 극동에서의 국제 평화 및 안전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때는 언제나 양국(미·일)중 어느 일방 체약국의 요청에 의해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동조약 6조에는 "일본국의 안전에 기여함과 아울러 극동에 있어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미합중국은 그 육군, 공군 및 해군이 일본국에서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하는 것

미(일) 정치·군사동맹체계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인식을 한층 더 자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같은 논리로 볼 때, 북한은 미국이 한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미군을 주둔시켜 근본적으로 아시아에서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전진기지로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까지도 영구히 정복할 것이라고 비난해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받는 단순한 위협 뿐만 아니라 강대국인 미국의 위협(군사개입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해 온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은 弱小國으로서 强大國 介入을 抑制할 수 있는 國防計劃을 동시에 수립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회주의 강대국과의 관계

북한은 1961년 이래 '미제국주의' 방어와 대미 군사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해 왔던 중국·구소련과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해 왔다. 중국은 구소련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구소련은 미·소냉전과 미·일·중 그리고 한·미·일의 안보협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북군사지원을 지속하여 왔던 것이다. 1954년부터 1980년까지 중국·구소련의 대북군사원조는 각각 561백만 달러, 1,796백만 달러이며, 구소련의 대북 군사원조가 중국의 약 3배 정도였다. 내용면에서도 최신군사장비를 비롯한 고성능 무기는 주로 구소련에 의해서 제공되었다.[25]

을 허용한다"고 밝힘으로써 한국을 포함한 극동에서의 안전을 위해서 미국과 일본은 상호 협력의지를 구체화하였다. 鄭光河, 「일본방위정책의 이상과 현실」 (서울: 慶南大學校 極東問題硏究所, 1989), p. 293 일본의 방위관련 조약 및 문서 참조.

25)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pp. 257~258.

특히 1980년대 들어와서 구소련의 대북 고성능무기 제공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구소련의 대북 군사적 이용이 증대된 것과 일맥상통한다. 즉 1984년 구소련의 외무차관 카피차는 청진항의 대소개방을 요구하였고 그 후 합동군사훈련도 제의하는 동시에 자국함정의 남포항(서해안) 기항과 항공기의 북한 영공통과권을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북한은 무기 이전의 대가로 구소련의 요구를 대부분 수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나아가 북한·구소련 양국군은 상호방문 및 연합훈련도 실시한 바 있다. 구소련 함대 및 비행단의 방북(1985.8, 1986.7, 1987.5 등)과 북한함대 및 비행단의 방소(1985.5, 1986.7 등) 그리고 1986년 10월 이후 세 차례의 해·공군 연합기동훈련 실시 등이 그것이다. 이와 병행해서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구소련으로 부터의 對북한 무기이전이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6]

그런데 북한은 구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이같이 막대한 양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한 구소련·중국의 영향력 확장에 대해서 일찍부터 심각히 우려해 온 것으로 보인다. 1963년 10월 28일 "사회주의를 옹호하자"는 제하의 「로동신문」 사설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원조를 준다는 자만심으로 그것을 정치적 간섭과 경제적 압력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무관하다. 자본주의나라간에 적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부대조건이 붙어있는 '원조,' 내정간섭을 전제로 한 '원조'는 사회주의나라간 있을 수 없으며 또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사회주의 나라의 원조는 그것을 받는 각각의 나라 주권과 독립을 강고히 하고 사회주의 진영의 강화발전을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27]

---

26) 위의 책, p. 258.
27) "사회주의를 옹호하자," 「로동신문」, 1963.10.28 사설.

특히 북한은 1980년 2월 6일부터 7일까지 불가리아의 소피아에서 개최된 「사회주의국가의원동맹 대표자 협의회」에서 구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에 조인하지 않음으로써 구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에 거부감을 표시했다. 이것은 북한이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구소련의 침공 가능성을 인식하는 그들 나름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28] 또한 중국·인도 국경분쟁, 중국·월남전쟁 등을 통하여 북한이 비록 친중국의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내심으로는 구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 못지않게 사회주의대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그들의 직접적인 안보위협 인식은 컸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북한은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에 대해 주권존중, 대소 패권주의 반대 등을 골자로 하는 「통일단결전략」 강조를 통해 사회주의 대국 패권주의에 대한 위협의식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29]

이렇게 볼 때 북한은 한·미연합체제의 군사적 위협 외에 동맹국가인 구소련·중국의 직간접적인 군사적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북한은 무력통일이라는 목적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강대국의 영향력 차단 또는 최

28) 정진위, 「북방3각관계」, p. 175.

29) 북한은 1979년 1월 구소련의 지원을 받은 베트남의 침공으로 캄보디아의 프놈펜이 함락되자 1979년 1월 12일자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 "베트남의 캄보디아에 대한 침공은 캄보디아에 대한 엄중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위업에 대한 배신이며 국제법과 평화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탄하면서 "지배주의에 대한 반대"와 "폴포트 정권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선언하였다. 「로동신문」, 1979.1.12; 북한 당국의 베트남 침공에 대한 공개적 비난은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들이 극도로 자제해온 전례와 비교해 볼 때 대단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이것은 북한 자신이 캄보디아와 마찬가지로 타 사회주의국가 특히 국경을 함께하고 있는 중국 및 구소련으로부터 고유의 주권이 유린되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표현되었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Robert Charvin, Albert Marouani, *Les Relations Internationales des Etats Socialistes* (Paris: PUF, 1981), p. 34 ft. 44 참조.

소화를 위해서도 독자적인 군사행동 능력 확보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국방자위 정책이 한층 더 강화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북한과 같은 小國이 사회주의 강대국에 대한 從屬 또는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자위적 국방력 건설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무기생산에 있어서도 상당한 정도의 自主化를 재촉하지 않으면 안된 것으로 보인다.

Ⅲ.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계의 특성

사회주의 국가들의 국방계획 결정은 반대입장을 지닌 계층에 의해서도 다소 영향을 받아온 측면을 간과할 수 없으나, 북한의 경우 모든 명령이 최고위 집권층(수령)으로부터 권위주의적으로 하달되어 그 결정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국방계획은 기본적으로 이념적이다. 이념적 강박충동과 정권위험에 대한 민감함, 대남적화통일의지 등은 상당히 획일적이고도 단호한 국방계획 결정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경우 중국이 보여온 내부 엘리트간의 갈등양상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국방계획은 그 어느 부문 보다 일관성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적 차원에서 국방계획의 결정 및 집행을 담당하는 관련조직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과 집행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할 필요가 있다.

1. 국방계획 결정 및 집행기구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은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권위주의적인 이념적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 명령은 강한 목적의식과 단결성을 요구하고 정확한 행동노선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는 당사자는 정권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최고지도자의 지위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둔다.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에 있어서 이러한 명령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공식기구들의 위상과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최고위 정책결정 직무: 당총비서, 주석, 최고사령관

북한정치체제에 대한 개념적 인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하나의 일치된 견해는 북한의 정책 및 계획결정이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이루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어떤 반대세력에 의한 정책적 이견이 존재할 수 없는 특성을 지녀왔다는 것이다. 적어도 외형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미루어 보아도 북한의 절대적 권력자인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의한 정책결정의 독점적 현상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김일성 생존시에는 공식적으로 김일성이 당·정·군의 최고위직을 겸직하면서, 김정일은 당·정·군의 제2인자로서 북한의 전반적인 정책결정권을 독점해 왔다.

북한권력의 최고 정점에 해당하는 직무는 김일성이 겸직해 왔던 공화국 주석직과 노동당 총비서직 그리고 최고사령관이다. 1972년 개정된 헌법 제6장 89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992년에 개정된 헌법에서는 단순히 "주석은 … 공화국을 대표한다"고 함으로써 북한의 주석은 행정, 외교, 군사, 입법, 사법 등 국정전반을 관장하는 국가주권의 '전반적' 대표자에서 '제한적' 대표자로 기능이 축소·조정됐다. 반면 1992년 개정헌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당의 영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11조)고 하는 '국가에 대한 당의 영도'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북한의 노동당 우위의 정치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바, 당총비서직은 당의 정책결정 및 집행 등 전반적인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당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최고실권을 지닌 직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72년 개정헌법에는 "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고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주석직은 군최고통수권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2년 개정헌법에는 주석이 군최고사령관직을 당연히 겸직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주석외에도 군최고사령관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군최고통수권을 제2의 인물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말하는 제2의 인물이라는 것은 군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김정일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최고위 정책결정직무 담당자가 공식적으로 김일성 일인에서 김일성·김정일로 이원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김일성이 당·정·군 차원의 최고수위에서 당·정에 한정되었고, 대신 김정일이 군차원의 최고수위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최고위 정책결정 직무담당자의 이원화는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위한 과도적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김정일이 당·정·군 최고수위를 단계적으로 모두 독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정일은 이미 당총비서와 군최고사령관에 추대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가 최고실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주석직에까지 오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동안 金父子가 모든 구체적인 정책현안들을 직접 간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정책결정의 권한이 관련 조직에 일부 위임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요 당기구나 국가기구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제한적 결정권한까지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군사부문의 정책 및 계획결정과정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먼저 북한의 군사정책 및 계획결정 과정에 관련된 주요 공식기구인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인민군최고사령부, 인민무력부 그리고 인민무력부 산하의 총정치국과 총참모부의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나. 당중앙 군사위원회

북한인민군의 통수체제는 그 제도적 장치가 노동당 조직을 통한 정치지도체계와 정권기관을 통한 군사고유의 지휘체계로 이원화되어 있다. 당규약 제7장 47조에 명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북한 인민군은 "항일무장 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서 당의 중요한 한부분이 되고 있다. 이같이 북한 인민군이 당의 한 부분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당중앙위원회와는 별도로 당중앙군사위원회[30]를 구성하고 있다. 군사와 관련하여 당차원의 최고수위 기관이 바로 당중앙군사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노동당 규약(1980.10.13 6차 당대회 개정) 제3장 27조에,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군사정책 수행 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우리나라 군대를 지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군사부문의 최고결정·심의기관임을 알 수 있다. 김일성 사망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직은 당총비서 겸 주석인 김일성 자신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은 최고사령관 김정일을 포함한 군최고 수뇌부들로 구성되었다.[31]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직을 비록 김일성이 차지해 왔다고 하

30)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가 조직된 것은 1962년 12월에 소집된 중앙위원회 제 4기 5차 전원회의에서 4대군사노선을 선언하는 등 군사력 강화에 관한 정책을 채택한 이후부터라고 전해진다. 그러나 1984년 이후부터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에서 분리되어 당중앙군사위원회로 개편 운영되고 있다.

31)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김정일 원수, 최광 원수(사망), 이을설 원수, 백학림 차수, 이두익 차수, 김광진 차수(사망), 조명록 차수, 이하일 차수, 오극렬 대장, 전문섭 대장, 태병렬 대장(사망), 이봉원 대장(사망), 김일철 대장, 오룡방 대장, 김명국 대장, 박기서 대장, 김철만 상장, 김강환 중장, 최상욱 중장 등임.

나 동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조직하고 지도해온 것은 김정일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근로자」의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는 군대와 인민은 필승불패이다"라는 제하의 다음과 같은 글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방침이 관철된 결과 인민군대는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술 기재로 장비되였으며 모든 군인들이 높은 군사지식과 기술, 주체전법을 체득하고 튼튼한 체력과 백발백중의 사격술을 가진 일당백의 싸움군으로 자라났다. 우리 당은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전체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 있다 … 이리하여 우리나라에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인민적인 방위체계가 튼튼히 세워졌다."[32]

그런데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일년에 한 두 번 소집되는 비상설기구로서 그 구성원 역시 다른 군사직책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군사 관련 세부정책이나 계획을 상시적으로 다루는 실무기구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단 필요시 김일성 또는 김정일의 지시로 특별한 안건이나 결정사항들을 토의·결정하는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는 정권기구 차원에서 군사부문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다. 기존의 북한헌법(1972.12.27 채택)에서는 주석 즉 김일성이 북한의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국방위원장으로 되며 일체의 무력을 지

32)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당은 바로 당중심인 김정일을 의미한다. 「근로자」, 제7호 (1991), p. 13.

휘 통솔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1992년 4월 9일 수정된 신헌법은 주석의 군사부문과 관련한 권한을 배제하여 국방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정하였다. 현재 북한의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하는 것은 주석이 아니라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다. 즉 1992년의 북한 수정헌법에 의하면, 국방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헌법 제3절 제111조)이 되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북한의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헌법 제3절 제113조)하도록 되어있다. 실제로 국방위원회는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 지도, 중요 군사간부 임명 또는 해임, 군사칭호 제정 및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 수여 그리고 유사시 전시상태와 동원령 선포 등의 임무와 권한(헌법 제3절 제114조)을 가지고 있다.

이같은 군사관련 권한은 1992년 수정헌법 이전에 중앙인민위원회의 군사관련 권한이었는데 김일성 생존시 김정일로의 군사지도권 승계를 정당화하기 위한 과도적 조처로 김정일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면서 국방위원회에 이양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 된 국방위원회는 당중앙군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비상설기구로서 관련된 군사적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위원회가 소집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황장엽 씨의 증언에 따르면 "국방위원회는 허구적인 유령단체"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활동은 거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앞서 지적한 헌법상의 권한은 국방위원회 자체의 것이라기 보다는 김정일 자신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합당할 것이다. 그 구성원은 위원장 김정일 원수, 제1부위원장 오진우 원수(사망), 부위원장 최광 원수(사망), 위원 이을설 원수, 이하일 차수, 김광진 차수(사망), 김철만 상장, 전병호 정치국 위원 겸 비서 등이다. 전병호 당비서를 제외하고는 전부가 군부이며 동시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이다.

라. 최고사령부

최고사령부는 군최고지도기구이며 유사시에는 북한군의 전투지휘 수행상의 실제적인 군최고집행기구가 된다. 이와 같이 전시의 군통수권 행사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최고사령부는 국방위원회 산하에 인민무력부와 동격으로 병립하고 있으나 법정기관이 아니다. 1991년 12월 24일 당중앙위 제6기 제1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인민무력부장 오진우가 부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최고사령부는 사실상 인민무력부 보다 우월한 실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고사령부의 총사령관인 김정일은 인민무력부를 경유하지 않고 총참모부를 통하여 全軍을 지휘하게 된다. 동시에 그는 인민무력부 소속이 아닌 인민경비대(사회안전부)와 민간무력인 노농적위대(당비서국 민방위부), 붉은청년근위대(당비서국 군사부)까지도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33]

그러나 북한군 상좌였던 최주활씨에 따르면 평시에 최고사령부라는 독립부처는 없으며, 다만 총참모부 내의 '작전국 2처'가 최고사령부 업무를 맡고 있는 부처로 인식되고 있다 한다. 다시 말하면 총참모부 작전국 자체가 최고사령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김정일이 최고사령관으로서 명령을 하달하거나 또는 밑으로부터의 보고를 접수할 때, 총참모부의 작전국 2처를 이용한다고 주장했다.[34] 이렇게 볼 때 유사시에는 총참모부 작전국 자체가 최고사령부로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3) 北韓硏究所 編, 「北韓總覽」 (서울: 北韓硏究所, 1994), pp. 833~834.
34) 최주활씨 면담(민족통일연구원, 1997.11.12)

마.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는 1982년 4월부터 정무원에서 분리되어 중앙인민위원회 직속기관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1992년 북한헌법[35]의 수정으로 국방위원회가 중앙인민위원회와 동격으로 격상 개편됨에 따라 인민무력부는 사실상 군사부문의 집행기구로서 국방위원회의 산하기관이 되어 있다. 인민무력부의 구성상 양대축을 이루고 있는 조직이 총참모부와 총정치국이다. 총참모부는 군사지휘행정 계통이며, 총정치국은 중앙당군사위원회와 당군사부 및 당조직지도부로부터 당적 지도를 받아 군을 지도하는 정치지도 계통이다.

총참모부는 당의 철저한 지도 아래 북한 무력의 전반을 총지휘하는 군최고집행기관으로서 육·해·공군의 군사작전 종합계획을 지휘·관리 통솔한다.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산하에는 군종·육·해·공 작전종합국을 비롯 병종별 각 국들과 과학기구들이 있다.

인민무력부 총정치국은 군의 당정치사업을 하면서 군을 통제해 나가고 있다. 총정치국 내에는 조직부와 선전선동부가 있으며 이 양대 기구가 군을 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총정치국의 역할과 기능은 군 당조직 집행기관으로서 당결정심의기구인 인민군당위원회의 직접적 운영기관으로 된다. 따라서 군총정치국은 직제상 인민무력부 산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당조직지도부 산하 군사부문의 당조직 기관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군정치국은 군종사령부, 집단군사령부, 군단·사 단·연대·대대에 정치부를 두고 있으며 중대급에는 정치지도원을 파견하여 군내 정치사업을 통한 군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

35) 1972년 개정헌법에는 정무원이 "인민무력건설에 대한 사업을 한다"(제8장 109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1992년 개정헌법에는 정무원의 이러한 군사부문 관련 권한과 의무가 삭제되었다.

가고 있다. 또한 군총정치국은 총참모부뿐만 아니라 인민무력부 자체 및 직속기관들에 대한 당적 지도도 겸하고 있다.

2. 국방계획 결정과정의 특성

콜린스(John M. Collins)는 국방계획 단계를 5가지로 나누고 있다.[36] 목표확인 단계, 적의 능력평가 단계, 전략수립 단계, 자원배분 단계, 수단과 목표 조화단계, 계획결정 단계가 그것이다. 목표확인 단계에 있어서는 국방계획 담당자가 누구든 간에 우선적으로 국가안보의 초석을 형성하는 여러 국가이익들을 보호하고 고양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차원의 국가목표를 확인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고려되는 주요 하부적 목표내용으로는 생존, 물리적 안보, 평화, 전략적 안정, 힘, 행동의 자유 등이 지적된다. 이어서 분명히 드러나는 위험성의 특성이라든가, 절박성 및 강도 등에 따라 국내외의 모든 적들로부터 국가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서 어떠한 우선순위로 어떠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는 바로 적의 능력판단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에 따라 개념적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분배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자원배분 담당자는 현재의 자원능력과 전략의 수행결과 달성할 수 있는 이익을 비교평가해서 자원배분 결정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국방계획 과정은 이 자원배분 단계에서 끝나게 되지만, 만약 자원배분 단계에서 수립된 개념적 전략이 거부되었을 경우, 마지막으로 수단(자원)과 목표(전략)간에 절충을 시도하는 단계가 이어지게 된다.[37]

---

36) John M. Collins, *The Force Planning Faculty* (Washington, D.C., US GPO, 1990), pp. 143~147.

37) Ibid.

콜린스의 이같은 국방계획 단계 구분은 서방선진국 특히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서방선진국들의 국방계획은 상당히 실용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나 결단성이 결핍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이들 계획들은 다양하면서도 변화가 심하며 여러 반대압력에 직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대압력은 정부부처내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외에서도 나온다. 정부부처 내에서는 예산관련 경제부처와의 알력이 조성될 수 있으며, 정부외에서는 여러 다양한 압력단체들 또는 일반시민들의 반대여론이 비등해 질 때도 있다. 이러한 제 압력을 수용·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방계획 자체가 상당히 변질되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과 같이 획일적 지도체계가 공고화된 국가의 국방계획 결정은 보다 단순하면서도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 북한의 경우 김정일 최고지도자의 군사적 명령이 떨어지면 다른 모든 부문의 것은 이 명령의 집행을 중심으로 조정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김정일이 탱크부대 보강을 위해서 신형탱크를 해외로부터 도입하라는 명령이 있게 되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미 여타 부문에 책정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전용해서라도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북한은 최고지도자에 의해 목표가 설정되면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최고지도자의 명령에 맞추어 나가는 획일적 결정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같은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과정은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위에서부터 획일적으로 하달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방계획 관련 실무담당 부서에서 출발해서 밑으로부터의 과정을 거쳐서 김정일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김일성의 명령은 인민무력부장 → 총정치국장 → 총참모장 → 실무부서 담당자 순으로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온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김정일은 인민무력부장, 총정치국장, 총참모

장 등을 거치지 않고 인민국 작전국장 김명국에게 직접 명령을 내려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8] 이와 관련해서 前 북한군 상좌 최주활씨도 최고사령관인 김정일이 직접 작전국장인 김명국에게 명령을 하달하고 김명국은 이를 위한 특별실무팀을 구성하거나 기존 실무부서에 명령을 하달해서 임무를 완성하도록 하고 최고사령부 부처로 알려진 총참모부 작전국 2처를 통해서 김정일에게 최종보고 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39]

최근에 김정일이 특별 '작전조'를 형성해서 새로운 전쟁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데, 이것 역시 김정일이 작전국에 직접 명령을 하달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40] 북한과 같은 획일체제에서는 이러한 단순화된 군사명령체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이 사실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 거의 모든 행정체계가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과 교류를 근간으로 한 '열린' 것이라기 보다는 주변 부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게 하는 '닫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체계는 거의 모든 부처가 독자적으로 金父子를 향하여 충성경쟁을 하면서 철저한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군사행정체계는 그 어느 부문 보다도 상호 폐쇄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에는 최고사령관의 특별명령으로 이루어지는 '上意下達' 차원의 국방계획 결정외에도 인민군 총참모부 실무 부처에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최고사령관에게 전달, 최종 결정을 획득하게 되는 '下意上達' 차원의 결정과정이 있다. 연례적이거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국방계획 결정들은 이러한 하의상달 차원의 과정을

38) 황장엽씨의 증언, 「조선일보」, 1997.7.10.
39) 최주활씨 면담(민족통일연구원, 1997.11.12).
40) 황장엽씨의 증언, 「조선일보」, 1997.7.10.

거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의 결정은 대략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예를 들어 인민무력부 대외사업국이 군사부문 대외활동 연례계획을 연말에 수립해서 이것을 최고사령관의 최종적 결정을 획득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하자. 먼저 대외사업국 담당 부서가 군사부문 대외활동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작성하게 되면 이를 먼저 당의 지침에 대한 상충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초급 당위원회 토론을 거치게 한 후, 관련 문건을 재작성해서 담당국장→작전국장 순으로 전달한다. 작전국장은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거친 후 최고사령관에게 보낼 정식문건을 5부 작성해서 인민무력부장,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작전국장, 작전국 2처에 각각 전달하여 재가를 요청한다. 여기에서 재가를 받게되면 이를 작전국 2처에서 최고사령관용 '1호타자'문서로 재작성해서 최고사령관에게 최종 보고를 올리고 그 결정유무를 담당국장에게 최종 통보하게 된다.[41] 이같은 예에서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과정상 나타나는 몇 가지 특성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군사관련 계획결정 전과정을 통해서 당의 통제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계획서 작성 초기단계부터 초급당위원회와의 토론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총정치국장의 합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당의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은 '합의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인민무력부 실무부서에서 계획이 작성되고 토론된 것을 작전국 → 총정치국 또는 총참모부 → 인민무력부 → 최고사령관 순과 같이 수직적 계선상으로 전달되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작전국, 총정

41) 최주활씨 면담(민족통일연구원, 1997.11.12).

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장의 합의를 거쳐 이를 작전국 2처에서 직접 최고사령관인 김정일에게 보고·결정하게 되는 '합의제' 형태를 띠고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군사관련 주요 기구들은 상하개념의 수직적 계선조직들이라기 보다는 수평적 계선조직이라 할 수 있다. 즉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작전국 등은 상하개념의 수직적 조직이 아니라 각각 고유의 권한과 역할을 지닌 수평적 조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북한의 주요 국방계획은 수령과 당으로 통칭되고 있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는 점이다.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수령과 당의 령도'라는 테두리 내에서 임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위대한 수령은 군대와 인민을 전쟁승리에로 이끄는 령장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적 당은 수령의 군사사상과 전략전술을 구현해 나가는 혁명의 참모부"라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아야만 군대와 인민이 수령의 탁월한 군사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군사활동과 전투행동에서 통일성과 일치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그 어떤 강적도 때려부실 수 있는 필승불패의 위력을 지닐 수 있다"[42]고 했다. 따라서 북한의 국방계획은 김일성·김정일의 군사사상, 군사전략·전술 및 군사지도 지침을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수립·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42)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는 군대와 인민은 필승불패이다," 「근로자」, 제7호 (1991), pp. 9~10.

IV. 북한의 주요 국방계획

앞에서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과정과 체계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은 거의 대부분 김일성·김정일의 명령과 지도에 의해서 독점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군사관련 당·정의 최고수위기관인 당중앙군사위원회나 국방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도 김일성·김정일 父子 자신이다. 국방계획결정과정에 있어서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총참모부, 작전국 등을 포함한 여타 주요 군사기구를 지휘하고 있는 인물들이 모두 당중앙군사위원회나 국방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독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다만 이들은 이 위원회를 통한 '집체적 결정'에 참가하고 있을 뿐이며, 이 또한 김부자의 명령과 지도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

또한 주요 군사기구들이 상하 계선상의 조직이라기 보다는 수평적 조직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어느 것이 상부기관이며 하부기관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북한의 국방조직은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충성경쟁을 수평적 차원에서 유도해 내고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국방계획은 상당히 세부적인 사항까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결정되고 시행되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지닌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 과정을 통해서 생산된 세부 국방계획을 살펴볼 것이다.

1. 운용계획

일반적으로 군사운용 계획은 일국이 당면하고 있는 위협의 평가에서 출발한다. 인지되는 위협은 공간적 측면으로는 국내적, 지역적 또는 국제적인 것으로, 수적 측면에 있어서는 단일적인 것과 여러 형태의 군사자원 배분을 요구하는 다수적인 것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또한 국외적 차원에서 볼 때, 그 위협이 강대국으로부터 혹은 중·소규모의 국가들로부터 나오는 것일 수 있다. 일반국가들은 각각 이같은 인지된 위협의 특성에 따라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군사력을 운용하게 된다.

북한이 인식하고 있는 군사적 위협은 남한이 주적이라고 생각하게 될 경우 비교적 단순할 수 있다. 남·북이 분단된 이후 남한이 군사적 위협의 대상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지 남한의 위협에만 국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미국의 한국방위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기반으로 한 주한미군과 더불어 유사시에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하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때문에 북한이 인식하고 있는 실질적인 위협은 한국에 연계된 미국의 군사적 존재라는 사실은 앞에서도 밝힌 바 있다.

또한 탈냉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과 구소련의 대북 군사적 위협 가능성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북한은 이들 국가와의 관계상 내적 긴장을 지속해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미군사동맹이 북한에 대한 주적으로서의 위협이라 한다면, 중국과 구소련은 북한의 제2차적인 위협으로 인식되어 온 것 같다. 즉 북한이 인식하고 있는 대외적 위협의 특성은 소국 대 소국(남한)적 위협이라기 보다는 소국 대 강대국적 위협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운용은 바로 이러한 대외적 위협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 군사태세

(1) 병 력

강대국의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소국이 직면하게 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의 문제이다. 약소국의 인적 자원은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약소국은 이러한 인적 자원 문제를 극복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군사참여비율(military participation ratio: MPR)을 강대국에 비해서 높이는 수밖에 없다. 북한이 상대적으로 인구수와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병력을 지니고 있는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6.25 당시 북한의 병력수는 198,380명[43]으로 북한병력이 남한 병력의 약 2배 수준이었다. 전후 1955년 말 북한군은 41만명 이상으로 증강되었다.[44] 1956년 북한인민군은 민간 노동력 고갈로 인해 8만명의 병력 감축 이후 1960년대 전기간을 통하여 30만명의 병력을 유지해오다가 1970년대에는 40 → 50 → 60만명대 수준의 병력으로 다시 증강하였다. 이어 북한은 1980년대 가서는 70~80만명대로, 1990년대에 와서는 90~100만대로 병력을 크게 증강하였다. 한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1996년 기준 북한의 상비병력은 105.5만명(지상군: 92만명, 해군: 4.7만명, 공군: 8.8만명)[45]이다.

---

43) 국토통일원, 「남북한국력추세비교」 (1979) p. 354; 미국측의 추정에 의하면 6.25 당시 남북한 병력은 남북한 각각 9.5만명, 13.5만명이다.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Yalu* (Washington, D.C.: GPO for U.S. Army, 1961), pp. 8~12; James F. Schnabel,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Policy and Direction* (Washington, D.C.: GPO for U.S. Army, 1972), pp. 39~40.

44) 함택영, "남북한 군비경쟁 및 군사력 균형의 고찰," 함택영 외,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서울: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1992), pp. 16~23.

45) 지상군의 경우 해병병력을 포함한 수치이다.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6~1997」 (서울: 국방부, 1996), p. 64.

또한 북한은 예비동원체계를 개발해 놓음으로써 엄청난 부담의 고충을 받지 않고도 유사시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현재 북한은 예비병력을 짧은 시간에 소집할 수 있고, 예비병력의 질과 훈련상태를 정규군의 그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올려놓고 있다. 북한은 1958년 중국군대의 철수 이후 안보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노농적위대를 조직하였다. 북한은 이 조직을 민병대의 근간으로 삼고 정규군의 예비대로서 훈련과 장비를 강화했다. 이에 더하여 북한은 1960~1970년대를 거치면서 노농적위대의 양적, 질적 향상을 꾀함과 동시에 또 다른 예비병력 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를 창설하여 그들의 방위력 지원능력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1980년대 이전 남북한의 예비병력 총수는 각각 330만명, 266만명으로서 남한이 우세하였으나,[46]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북한은 계속 500만 이상의 예비병력[47]을 그리고 남한은 450~480만 수준의 예비병력을 유지했다. 북한의 예비전력은 14세부터 60세까지 인구의 약 30%를 동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총예비병력은 66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중 전투동원 대상인 교도대가 164만명, 민방위대 성격의 노농적위대가 395만 여명, 고등학교 군사조직에 해당하는 붉은청년근위대가 84만 여명, 인민경비대가 14만 여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48] 그런데 예비병력의 특성면에 있어서 북한의 예비병력은 거의 정규병력의 수준에 접근해 있다. 특히 교도대와 경비대는 예비전력의 핵심으로서 유사시 부대 단위로 즉각 동원하여 전투투입이 가능할 정도로 정규군과 유사하다.

---

46) 국토통일원, 「南北韓國力趨勢比較」, p. 395.
47) 1985년 기준 북한의 예비병력 현황을 보면 교도대 101만명, 적위대 308만명, 근위대 107만명으로서 총 516만명에 달한다.
48)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6~1997」, p. 51.

(2) 재래식 무기체계

무기보유 측면에 있어서도 북한은 집중적인 투자를 지속해 왔다.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은 지상무기 면에 있어서 별로 변동을 보이지 않다가 1967년에 가서 도하용 K-61(87대), PTS(30대), LPP(144대)의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며, 1968년에는 T-34 및 JS-2/3 등의 구형전차를 점차 퇴진시키고 신형전차인 T-54/55/59(251대)로 대폭 증강시켰다. 1970년대 들어와서는 야포, 박격포, 고사포, 방사포 Frog 미사일(1973년) 그리고 장갑차, 전차 및 도하장비(1975년)가 현격하게 증가되었다. 1980년대에도 이러한 지상장비의 증가는 계속되어 數的으로 남한의 2배 수준을 유지하였다. 1996년 현재 북한은 전차 3,800여대, 장갑차 2,800여대, 야포 11,000여문, 방공무기 12,500 여문[49] 정도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수적으로 지속적인 대남우위를 견지하고 있는 셈이다.

해상무기 측면에 있어서도 1960년대 들어와서 북한은 해군력을 증강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북한은 1961년부터 1967년까지 연평균 200명 내외의 해군 병력수 증가 현상을 보였지만 1960년대 말까지 기지 중심의 연안방어체계의 해군력을 보유하였을 뿐이었다. 1970년대 들어서 북한은 자체함선건조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함선의 대형화 및 표준화에 의한 대량건조체제에 진입했다. 북한의 1970년대 전반기의 전투함정 도입·건조 척수는 각각 29/162이며, 지원함정의 도입·건조 척수는 각각 6/54이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전투함정, 지원함정 도입·건조 척수가 다소 감소해서 북한의 전투함정 및 지원함정의 도입·건조 척수가 각각 6/46, 0/41을 기록하고 있다. 1980

49)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6~1997」, pp. 47~48.

년대 들어와서도 북한은 자체건조 척수를 늘려왔다. 1985년 현재 북한의 해군무기체계 보유현황을 보면 잠수함 19척, 호위함 2척, 초계정 34척 등 총척수가 500에 이르렀다.[50] 1996년 현재 북한의 해군무기체계 보유량을 보면, 경비함, 유도탄정, 어뢰정, 화력지원정 등 수상전투함이 430여 척, 잠수함 35여 척(소형 잠수함 9척 포함), 상륙함, 공기부양정 등 지원함 335척 등이다.[51]

북한은 공군력 증강 노력 역시 게을리하지 않았다. 1963년 MIG-21기의 도입, 레이다관련 병력증강, 방공 및 조기경보능력 강화, 1966년의 고사포부대의 공군편입, MIG-19 및 AN2기의 대량도입이 있었다.[52] 또한 1970년 이후 신형기 SU-7 및 MIG-21, MIG-19 등이 계속 증강되었다. 특히 1973년 이후 북한은 공군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MIG-19기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였으며 IL-28 경폭격기 및 AN-2기 및 SA-2유도탄을 증강시켰다. 1980년대들어 와서도 북한의 항공장비가 꾸준히 증강되어 1990년에는 전술기 840대, 지원기 480대, 헬기 280대의 보유량을 보였으며, 1996년 현재 지원기(510대)와 헬기(290대) 부문에 있어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냈다.[53]

(3) 전략무기체계

북한이 개발해온 전략무기로는 핵무기,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이 지적된다. 북한은 1950년대의 핵무기 건설을 위한 기반조성기를 거쳐서 1960~1970년대를 거치면서 적극적인 연구에 돌입하였다. 즉 북한은

50) 대한민국 국방부, 「일본방위요람」 (1985), p. 287.
51)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6~1997」, p. 48.
52) 국토통일원, 「南北韓國力趨勢比較」, pp. 378~382.
53)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6~1997」, pp. 49~50.

1964년 평북 영변에 원자력 연구소를 설치했으며, 1965년에는 구소련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함과 동시에 이것을 자체 기술로 4MW 규모로 증설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핵무기 건설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1980년대에는 원자력의 실용화와 핵개발 체계의 완성에 주력하여 우라늄의 정련 및 변환 시설을 운용하기 시작하였고, 영변에 재처리 시설을 건설하고 고폭실험을 실시했다.[54] 황장엽 전노동당 비서의 증언[55]에 의하면 북한내에서는 그들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거의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은 현재 핵무기를 완성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는 때는 하시라도 핵탄두를 조립할 수 있는 핵보유문턱(Nuclear Threshold)에 도달해 있다는 설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에 더해서 북한은 핵무장의 최종단계인 운반수단의 확보에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어 핵위협을 더해주고 있다. 1980~90년대 현재 지대지 미사일(사거리 500km)은 15기 정도, Frog 5/5/7은 54기 정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남한전지역을 사정거리에 두는 개량형 SCUD 地對地 미사일(사거리 500km) 부대를 연대규모에서 여단규모로 증편했으며 최근에는 일본까지를 사정거리에 두는 노동 1호(사정거리 1,000km)개발에도 성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56] 이들은

54) 기폭장치 및 특수폭약 개발을 통하여 행하게 되는 고폭실험을 1983년부터 현재까지 약 70~80회에 걸쳐 수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철환, "북한의 과학기술수준," 「신동아」 (1990.12), p. 217.

55) 황장엽 자신이 비록 핵무기와 그 관련시설을 직접 본적은 없으나 1992년 IAEA특별사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북한이 NPT를 탈퇴(1993.3)했다는 점에서 그를 포함한 모든 당비서들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 믿게 되었다고 했다. 「조선일보」, 1997.7.11.

56) 일본에서 발행하는 「군사연구」誌 1993년 8월호에 북한이 노동1호에 이어 사정거리를 각각 1,000km/1,500km로 하는 노동2/3호도 개발중에 있다는 내용의 글이 발표되었다.

모두 약 1톤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서 핵탄두를 운반할 능력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핵미사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완벽한 요격 미사일(ABM)망이 설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러한 핵미사일 공격은 폭격기에 의한 원폭의 공중투하를 능가하는 위협이 될 것이다.

북한은 또 다른 전략무기로 생화학 무기를 개발해왔다. 북한이 세균무기로 콜레라, 페스트, 탄저균, 유행성 출혈열 등 전염성 작용제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57] 북한의 생물무기 개발수준은 원시적 단계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북한은 화학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산업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1970년대 초반에는 구소련으로부터 훈련지원과 소량의 화학 작용제 및 기술지원을 받았으며, 후반에는 일본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농업용 화학물질의 수입량을 확대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는 각종 화학제를 자체 생산·비축하게 되었고, 대규모 살상능력을 가진 화학무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북한의 공격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되었다.[58] 북한은 현재 화학물질 생산을 완전히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생산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연간 4,500t의 화학무기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59]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은 강대국에 비해 매우 높은 總人口 대비 軍事參與比率(MPR)을 보이고 있으며, 재래식 무기체계를 비롯한 전략무기체계 보유 및 개발수준 역시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57) 「조선일보」, 1995.3.22.

58) 北韓硏究所 編, 「北韓總攬」, p. 855.

59) 「조선일보」, 1995.3.22; 황장엽도 북한이 높은 수준의 화학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으며 「화학무기금지협약」에도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북한의 확고한 입장이며 상층부에서는 생물무기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중앙일보」, 1997.7.11.

특히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은 주적으로서 남한과의 군비경쟁 차원에서 중요성을 갖는 것일 뿐만 아니라 對 주변 강대국(특히 미국)의 위협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군사태세 차원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한 전략무기체계 보유와 개발에 혈안이 되어온 1차적 이유는 군사적 경쟁 상대국인 남한을 무력적화시키기 위한 공격력 확보에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 있어서 북한이 가장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한국 단독 군사력이 아니라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동맹군사력인 바, 북한의 전략무기체계 개발노력은 한국에 연계되어 있는 미국 즉, 강대국에 대항하려는 군사능력 확보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의 핵을 자신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해 왔다. 미국은 휴전 이후 핵무기체계에 의한 대량보복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게 되었다. 휴전 이후 잔류하게된 주한미군 2개 보병사단은 핵무기로 장비를 갖춘 5개 전투단으로 편성된 펜토믹(Pentomic)사단으로 개편되고 1958년 1월에는 재래식 포탄이나 전술핵 탄두를 다같이 발사할 수 있는 280mm원자포와 地對地 미사일인 어네스트 존을 보유하게 되었다.[60] 물론 이러한 한반도의 핵무기는 일차적으로 억지 그리고 다음으로 방어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선제공격이 전제되지 않는 한 북한은 주한미군의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거의 우려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북한이 이에 대해서 상당한 위협을 느껴온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남조선에 핵무기가 제거되어야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화근이 없어지고 조선인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나라 인민들이 핵위협을 모르고 평화롭게 살수 있다"[61]고 밝힘으로써 주한

60) 하영선, 「韓半島의 核武器와 世界秩序」 (서울: 나남, 1991), p. 213.
61) 「로동신문」, 1986.6.24.

미군의 핵위협을 경고하고 있다. 이같이 한반도의 세력균형에서 불안을 느껴온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 또는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서라도 핵무기 생산에 강한 인센티브를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

같은 맥락에서 카플란(Morton Kaplan)은 "체코슬로바키아가 소량의 핵무기만 가졌더라도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데 훨씬 더 신중하게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62] 북한이 소규모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이것은 북한을 핵강국인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도 있다. 동시에 사회주의 강대국들로부터의 직간접적인 정치·군사적 개입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소국인 북한이나 체코가 소량의 핵무기를 가졌다해서 강대국인 미국이나 구소련에 대해서 선제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그렇다 해서 소국들에 의한 공격을 완전히 부정하기도 어렵다. 특히 북한과 같이 국제적으로 '무법국가'(pariah state)로 국제적으로 낙인찍힌 국가에 대해서 강대국을 공격하는 무모함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상존한다. 이러한 논리가 강대국에 의해 조금이라도 인식된다면 소국의 핵무기 보유는 강대국에 대한 억제능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는 데도 일정한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김덕홍·황장엽의 진술에 의하면, 북한의 김정일 및 당·정·군 고위간부들은 경제력은 남한이 월등하나 군사력은 북한이 우세하여 외부간섭(미국)만 없으면 100% 힘에 의한 적화통일이 가능

62) 이같은 논조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Morton A. Kaplan, "Unit Veto Reconsidered," in Richard Rosecrane, ed., *The Future of the International Strategic System* (San Francisco: Chandler, 1972), p. 53; George H. Quester, "The Politics of Twenty Nuclear Powers," In Richard Rosecrane, *The Future of the International Strategic System*, (San Francisco: Chandler, 1972), p. 67.

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한다.[63]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미군철수를 위한 대미협상에 있어서 핵카드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유사시에는 '핵공갈'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차단하고 독자적으로 군사적 승리를 추구할 수도 있다. 즉 전쟁발발시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있을 경우 미군이 주둔해 있는 남한지역에 핵무기를 쓸 수밖에 없다는 '공갈'로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전술적 측면에 있어서도 북한은 핵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해 왔을 수도 있다. 핵무기 전술은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약소국의 입장을 보완해 주는 이상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스위스의 전략가인 다니케르(Gustav Daniker)에 의하면, 한 개의 전술핵탄두는 30만명의 군인과 800트럭분의 화약을 필요로 하는 7,200문 대포의 3분 동안 발사능력과 맞먹는 다는 것이다. 또한 미래에 항공기나 탱크 같은 재래식 장비들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약소국들은 무기획득에 GNP의 보다 많은 비율로 투자하게 되더라도 방위능력을 보장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약소국들의 방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가장 싼 최선의 선택이 바로 핵무장 옵션이라는 것이다.[64] 따라서 북한 역시 경제력의 제한성을 안고 있는 小國으로서 그들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력 증강계획의 일환으로 핵무장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 북한이 '貧者의 핵무기'라 불리는 생화학 무기나 핵탄두나 생화학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의 집중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북한의 軍事態勢는 단순히 小國 對 小國 차원을 넘어서 小國

63) 「조선일보」, 1997.7.11.

64) Michael Handel, *Weak Stat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London: Frank Class and Company Limited, 1981) pp. 206~207.

對 强大國 차원에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북한은 강대국인 미국의 개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다 우세한 화력과 기동력, 전자능력, C3 I[65], 나아가 미국의 전술핵무기 등을 무력화시킬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구사할 필요성에 직면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군사 준비성

북한은 그들의 군대에 수시로 「전투동원태세명령」을 하달함으로써 부대 전투태세 역량을 강화해 온 것이 사실이다. 1980년대의 경우 북한은 1983년의 「준전시 상태의 돌입 명령」, 1984년에는 「전투동원태세 강화명령」, 1985년에는 「전투동원준비 강화태세 명령」, 1986년에는 「전투동원태세를 갖출데 대한 명령」을 하달한 바 있다. 북한은 이러한 비상명령을 통하여 인민군으로 하여금 "조성된 정세에 맞게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세우고 항상 동원된 태세에서 전투적으로 살며 일할 것"을 요구해 온 것이다.

특히 「준전시 태세」 명령이 떨어지면 정규군인 인민군은 말할 것도 없고 노농적위대, 붉은 청년근위대, 교도대를 비롯한 모든 예비병력들조차도 거의 전쟁을 방불케하는 상황에 돌입한다. 우선 북한 전역에 구축해 놓은 갱도생활에 돌입하게 된다. 귀순자 김광춘의 증언에 의

65) C3 I(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and Intelligence)란 위기시에 적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국가 지도자의 신중한 통제하에 불필요한 확전을 막고, 지휘관으로 하여금 가용정보 및 첩보를 생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하여 제한된 병력을 가장 유효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처해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C3 I 체제의 목적은 국방조직의 '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 그리고 교리의 3위체제적 통합으로 지휘, 통제, 통신 및 정보기능을 유기체화함으로써 장차전에서 피해국한과 생존보장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전승을 거두는 데 있다.

하면, 적의 핵공격과 화학전에 대비해 만들어진 지하요새(갱도)에는 중대인원이 대피할 수 있을 정도로 숙소에서 회의실까지 없는 것이 없으며, 보통때는 갱도훈련을 해도 잠만 갱도안에서 자고 생활은 밖에서 했는데, 준전시 상태에 들어가면 갱도안에서 며칠이고 생활을 해야한다고 한다.[66] 또한 비정규군으로서 가장 느슨하다는 노농적위대조차도 준전시 상태에 돌입하게 되면 보통 100일전투, 200일전투라 해서 적위대 복을 입고 신발끈도 풀지 않은채 일을 한다고 한다.[67]

북한의 군사정책 또한 "언제든지 나가 싸울 수 있게 항상 준비되고 동원된 태세의 견지라는 방침"에 중점을 두어왔다. 북한은 국내외 정세가 그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때에는 언제나 독자적으로 전면전, 국지제한전, 특공전 등을 감행할 수 있도록 인민군 부대조직의 준비성을 강화해 왔다. 북한은 이같이 별도의 전쟁기구가 필요없이 전쟁발발시 평시체제를 그대로 전시에 적용하는 「戰時型國家管理體制」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황장엽 씨는 북한의 군사 준비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68]

첫째, 북한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 평시체제를 그대로 전시에 적용하는 전시형국가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기생산은 100% 자체 해결하고 있고 전투헬기, 미사일, 방사포도 대대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둘째, 갱도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하고 대포출입조차 가능케 되어 있는 등 완전지하 요새화 되어 있다.

셋째, 산업분야의 전기공급이 아무리 부족해도 지하군사시설에 사용되는 전력은 절대 다른 곳에 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넷째, 북한의 특수전 부대들은 부대별로 남한내 미사일 기지, 공항

66) 김균태 엮음, 「안경없는 군대 이야기」 (서울: 의암출판, 1993), pp. 211~212.
67) 위의 책, p. 117.
68) 「조선일보」, 1997.7.12.

등 주요 戰略施設에 대한 타격목표를 선정해 놓고 있으며, 유사시 항공육전대(공수부대)나 쾌속정으로 들어가서 타격하도록 완벽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북한은 이같이 전쟁준비태세를 거의 상시적으로 갖추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전쟁정신으로 충만토록 하고 있다.[69] 국토는 언제 어디서 적의 침입이 있을지라도 방어할 수 있는 하나의 군사기지 역할을 하도록 해놓았다. 도시, 산업체, 모든 전략지점들에는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고사포들이 설치되어 있다. 평양도 예외가 아니다. 김일성은 '일당 백'의 좌우명을 내세워 북한주민들이 질적으로 높은 차원의 정신적이고 실제적인 훈련을 통하여 무기를 휴대하고 육체적인 전투기술과 여러 가지 장비로 가능하면 많은 적을 살해할 수 있도록 단련시켜 왔다.

다. 군사전략·전술

북한은 小國으로서 인구총량 이상으로 상비군이든 예비군이든 병력을 강대국인 미국에 대항해서 충분히 늘릴 수 없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병력외 군사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측면에 있어서도 북한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인 취약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미국은 장기간에 걸쳐서 대규모의 공군력을 증강시킬 수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못하다. 강대국인 미국과는 달리 小國으로서 북한은 정교한 무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국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북한이 기존의 생산시설을 이용해서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 생산량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분야에서 흔히 약소국들은 외부적인 도움에 매우 쉽게 의존하게 된다. 무기생산 측면에서

69) 한스마르츠키 지음, 정경섭 역, 「兵營國家 북한」 (서울: 동아일보사, 1991), pp. 129~130.

북한은 중국과 구소련에 상당히 의존해 왔다는 사실이 이를 잘 설명해 준다. 그러나 이들 사회주의 강대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될 경우 이 역시 정권위협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바, 이러한 외부적 의존에도 한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한정된 자원하에 놓여있는 북한이 한·미연합 군사력에 대항하는 전쟁을 수행하게 될 경우 우려하는 것은 장기간 계속되는 소모전이기 때문에, 이동이 짧은 전쟁, 즉 게릴라전과 같은 전격적이고 단기적인 전략을 채택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인민군의 구체적인 전략구상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으나 다수의 호전적 언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명해 왔다. 북한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다"[70]고 주장함으로써 그들의 '대남적화통일'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한 김일성의 군사전략 기본원리 역시 예외는 아니다. 김일성은 "전쟁은 정책의 연장으로서 지배계급이 대내 정책을 대외정책에 반영한 무력적 혁명 무장력"이며, "정권을 쥐려면 무장투쟁을 해야하며, 정치놀음을 해가지고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71]고 함으로써 전쟁불가피론을 우선 강조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공격작전으로 적을 포위 섬멸함과 동시에 방어, 역습, 배후교란 등 적극적 공세활동을 전개"[72]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6.25 전쟁, 과도한 국방비지출, 군사력 70% 이상의 휴전선 50km이내 집중배치, 포병의 전방배치 및 DMZ 지하땅굴 건설 등은

70) 1980.10.13,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
71) 김일성, "조선인민군창건 스므돐을 맞이하여 (1968.2.8)," 「김일성저작집 2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 6~10.
72) 위의 글.

북한인민군의 공격전략 의도를 반영하는 것임을 입증한다. 실제로 북한은 이러한 공격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군사전략을 수립하여 일관되게 추구해 왔다. 인민군의 기본 군사전략은 정치전략을 우위로 하여 3대혁명역량의 선축적을 강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결정적 시기에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배합한 속전속결전으로 전쟁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그 요지는 군의 정치·군사적 역량강화, 정치·사상적 우세에 의한 양적우세 打勝, 유격전적 우세에 의한 군사기술적 우세 打勝, 선제기습공격에 의한 속전속결전 등이다.

북한은 우선 전면기습 공격으로 적에게 심리적 타격을 가하여 혼란을 조성하고 전쟁주도권을 장악하여 유리한 전략적 여건하에 전쟁을 수행하는 기습전략을 강구해 왔다. 기습전략은 북한전략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정규군에 의한 대규모 전략적 기습으로부터 비정규군에 의한 전술적 기습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고도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은 정규전과 비정규전 배합[73]의 기습공격을 통해서 주전선에서의 전투와 병행하여 후방지역 비정규전에 의한 또 다른 전투로 배후에 제2전선을 형성하여 남측의 동원을 방해하고 지원 및 증원을 곤란하게 하는 등 전후방을 동시 전장화하여 민·군의 전의를 상

73) 북한은 김일성 군사전략의 핵심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배합전략의 의의 및 성격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수령께서는 대부대 작전·소부대 작전을 밀접히 결합하며 유격전쟁 경험과 현대적 군사기술을 배합하고 유격전법과 현대전법을 결합하며 유격대의 적극적인 활동에 배합하여 전인민적 항쟁을 조직전개할 데 대한 방침 등 적을 전략전술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탁월한 방침들을 창조하였다. 대부대 작전과 소부대작전을 밀접히 결합하는 것은 집중과 분산, 신속한 기동을 능숙히 실현하여 적을 타격하고 소멸하는 유격대의 전술적 원칙에 전적으로 맞으며 유격대로 하여금 언제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적을 타승할 수 있게하는 현명한 전략전술적 방침이다. 유격전법과 현대전법을 배합하고 유격대의 활동과 전인민적 항쟁을 결합하는 것은 상비병력을 핵심으로 전체인민을 하나의 전투대오로 꾸려 거족적인 전쟁역량을 마련하고 대규모적인 정규전쟁과 영활한 유격전을 배합하여 적들을 도처에서 타격하며 소멸하여 조국땅을 완전히 해방할 수 있게하는 전략전술적 방침이다." 「로동신문」, 1972.4.19.

실케 하는 전략을 도모해 왔다. 이러한 기습전략은 이미 북한에 의해 한국전쟁시 시도된 바 있으며, 현재 북한은 정규군의 기동력을 극대화하고, 비정규군의 무장을 경량화함으로써 군사행동에 있어서 속도에 의한 기습효과를 최대한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하여 기갑 및 기계화 부대 등 기동전력을 증강하고 경보병, 특수전 부대를 통합하며 특수전 전력의 조직을 강화하여 기동전력과 특수전 전력의 배합에 의한 기습적인 전격전, 즉 속도전의 준비를 강화해 오고 있다.

북한이 일찍부터 이러한 기습전략에 의한 속전속결전략을 택해 왔다는 사실은 북한 인민군 제1부참모장이었던 김철만의 논문에서 속전속결전략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현대전은 장기성을 띠지만 그 수행방법, 매 작전과 전투들은 속전속결을 요구하고 있다. … 그것은 현대전이 위력한 타격수단과 기동성이 빠른 기동기자재들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과 관련된다. 교전쌍방은 현대전의 이러한 가능성을 이용하여 전쟁을 속전속결하려 한다."[74]

특히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의 본격적인 개입 등의 외세개입 이전에 수도권 지역을 장악, 전략적인 우위를 확보하여 전쟁을 종결할 필요성 뿐만 아니라 장기 및 종합전의 상대적 취약성으로 인하여 속전속결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전쟁을 속전속결화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외세 개입 이전에 수도권 조기 장악 등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무모한 전진을 계속하지 않고 먼저 유리한 전략적 상황을 조성한 다음 정치협상을 통해 그들이 바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북한의 전폭기 다량보유, 전차 등 공격성 장비강화, 서울에 근접한 서부 및 중부로의 기갑사단 집중 및

74) 김철만, "현대전의 특성과 그 승리 요인," 「근로자」, 제8호 (1976) pp. 84~40.

전진배치, 휴전선 가까이의 전폭기, 미사일, 특공대배치, 지상군의 완전자동화기화 및 특수 8군단 보유 등은 그들이 실질적인 속전속결태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2. 획득계획

북한은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이 추구해온 대병력주의와 그들의 전략·전술인 선제기습, 정규·비정규전 배합, 속전속결 및 총력전에 필요로 하는 무기를 단계적으로 획득해 왔다. 구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은 서방제국과는 달리 발전된 산업기술적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에 질이 우수한 소수의 무기 보다는 적절한 성능을 지닌 대량의 무기와 다수병력 중심의 무기체계를 유지해 왔다. 대병력주의는 질적 열세를 수적 우세로 보완한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군사장비 개발기조는 대량소모를 전제로 한 저투자·고소모 개념으로 고도의 기술 보다는 야전 적응성 위주로 개발하고, 동시에 적절한 개별성능을 가진 단일장비체계를 대량생산하여 복합운영케함으로써 무기효과를 제고한다는 것이다.[75]

동구국가와 마찬가지로 취약한 경제기반과 낮은 기술수준을 지닌 북한은 서구형 기술주도의 자본집약적 무기체계 보다는 인건비가 저렴하고 풍부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大兵主義的 노동집약형 무기체계를 보유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

75) 서구·동구형 무기체계 비교에 관해서는 안보문제연구소, 「무기체계의 발전과 군사전략」 (서울: 안보문제연구소, 1981), pp. 7~10 참조.

가. 무기획득 기조

김일성의 군사노선인 '자위로선'은 주체사상이 군사면에서 실현된 것이다. 김일성은 외래침략자들과의 전쟁에서 "외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역할"을 하는 데 지나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제나라의 '주체적 역량'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76] 또한 그는 "공화국정부는 우리당의 자위의 정신을 구현하여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로 하여금 전쟁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치사상적 준비를 철저히 갖추게 하며 이미 쌓아놓은 튼튼한 민족경제의 자립적 토대에 의거하여 나라를 방위할 수 있는 물질적 준비를 충분히 갖추는 동시에 나라의 군사적 위력을 더욱 강화할 것"[77]이라고 공언했다. 이같은 김일성의 군사적 자위노선은 북한의 '국방건설 정책'과 관련한 전분야를 지배하고 있다.

먼저 북한은 자립적 군수공업을 강화하도록 독려해 왔다. 그들은 자립토대를 강화하여 자체의 기술, 자체의 힘, 자체의 자재로 무기와 군수물자를 만들도록 하며, 현대전의 요구에 부응해서 군수공업의 부문구조를 다면화, 전문화하는 것과 함께 기술혁명을 강화해서 군수품의 품종과 생산량을 더욱 늘이고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였다.[78] 또한 북한 당국은 자립적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혁명을 통한 자립적 군수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면서, 기술혁명 역시 "주체적 입장에서 수행해야 과학자, 기술자들과 광범한 근로자들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기술혁명을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에 철

76) 김일성,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1967.12.16)," 「김일성저작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 539.
77) 위의 글, p. 540.
78) 사회과학출판사 편, 「정치사전」, pp. 873~874.

저히 복무시키면서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국내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경제를 더 빨리 발전시킬 수 있다"[79]고 주장했다.

그런데 북한이 자립적 기술혁명을 통한 자립적 공업기술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해서 외부로부터의 과학기술 도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김일성에 따르면, 북한은 군사기술을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사대주의를 철저히 반대하며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을 배워와도 주체적 립장에 서서" "나라의 현실에 맞게 발전시키는 원칙을 견지"해나가야 한다고 했다.[80] 특히 김일성은 1966년 10월 노동당 제 2차 대표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는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발톱까지 무장한 원수들의 침략에 대비하여 우리 인민군대를 현대전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하겠습니다. 모든 수단을 다하여 무기들을 현대화하며, 최신 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 더욱 위력한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민군대를 현대화하며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산이 많고 해안선이 긴 우리나라의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지난 조국 해방전쟁에의 경험이 잘 보여준 바와 같이 군사분야에서 교조주의를 범하게 되면 국방에 심중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민군대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발전시키고 도입하여야 하며 현대적 무기와 함께 재래식 무기를 배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81]

---

79) 위의 책, p. 126.
80) 위의 책, p. 126.
81)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1966.10.5)," 「김일성저작집 2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426~427.

여기에서 김일성은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되 자체의 기술로 그들의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거나, 꼭 필요한 것은 외국에서도 받아들일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국이 어느 정도의 발전역량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총력전에서 자주방위를 스스로 펼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무기를 모두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첨단과학기술과 장비를 필요로 하는 전투기 생산의 경우 이들 小國들은 선진 강대국 중 어느 한 국가에 기술과 장비의 원조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세계에서 현대적인 첨단 제트엔진을 고안 생산해 낼 수 있는 국가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북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무기체계는 기본적으로 구소련 무기체계를 따르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구소련을 비롯한 외부 무기 공급자에 대한 자신의 종속을 우려해 온 결과 가능하면 비용과 편익(cost-benefit)을 무시하면서까지 다양한 종류의 많은 무기를 국내에서 생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북한 지도자들은 타국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게 되면 군사적으로 원조국에 종속될 수 있으며, 그 후 원조국이 북한당국에 대해서 곤란한 요구를 강제한다든가 무기부품을 계속 원조국의 것만을 사용하도록 종용하게 되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위험성을 일찍부터 인식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은 구소련이나 중국으로부터 무기 또는 군사기술 원조를 받더라도 가능하면 이들 사회주의 강국으로부터의 의존성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던 것이다. 특히 북한은 구소련과 중국간의 갈등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들 국가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시켜 나감으로써 종속적 여파를 최소화했다. 그 결과 구소련이나 중국이 북한에 막대한 군사원조를 공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북한 간섭에는 한계성을 드러냈다

고 할 수 있다. 구소련이나 중국은 김일성유일지배체제나 세습정권을 못마땅하게 인식해 왔으면서도 이를 저지할 수 없었으며, 오늘날 북한에 대한 개혁·개방 요구에 있어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무기획득 기조는 크게 두 가지로 특징지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서 군사과학 및 기술을 자주화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불요불급한 것은 타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되 협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종속의 위험성을 철저히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것이다.

나. 무기획득 전략

(1) 군사우선의 개발전략

북한은 군사부문에 절대우위를 둔 국가자원배분전략을 구사해 왔다. GNP의 20% 이상을 국방비에 투입하고 최고수준의 과학자를 군사기술개발에 우선적으로 종사하도록 배치했으며, 공장시설도 군수산업부문에 우선 배당했다. 북한은 1960년대의 국제긴장상태를 구실로 군사·경제건설의 병립노선과 '4대군사노선'을 채택·실천하면서 군수공장의 범위를 더욱 확장시켰다. 주요 금속·공작기계·정밀기계·자동차·트랙터·통신기계공장 및 조선소 등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군수품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했다.[82]

북한의 공업구조를 보면 1961년부터 실시한 제1차 7개년경제계획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공업투자구성비 58% 중에서 중공업이 43.5%(전

82) 崔周煥, 「北韓 經濟論」 (서울: 대왕사, 1992), pp. 128~129.

공업투자비는 75%)였고, 경공업은 14.5%(전공업투자비로는 25%)에 불과했다. 또 1970년대의 6개년 경제계획에서는 오히려 더 높은 비율을 보여 공업투자 구성비 49% 중에서 중공업이 41%(전공업투자비로는 83%), 경공업은 8%(전공업 투자비로는 17%)에 불과했다. 제3차 7개년계획에서는 한정된 자금속에서도 주민복지시책은 비중이 감소하고 금강산 발전소, 스포츠시설물 등 정책적 사업에 중점투자하는 한편 중공업 중시정책을 견지하고 첨단산업 기술개발 및 특수강 등 소재공업 육성으로 군수산업 능력의 지속적 증강을 도모해 왔다.[83]

특히 북한은 군수산업 육성 관련 부문인 기계공업, 금속공업, 화학공업 등 중공업 중심의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 공작기계, 동력기계 제작기술의 발전은 전차, 항공기 부품생산 기술과 연계되며, 비철금속제조 기술 철강공업 중에서도 기술집약적인 특수강재 제조기술 발전은 전차, 야포 등의 무기소재 생산과 연계된다. 또한 군수화학 및 군수식량 보급 목적으로 비료공업 발전은 화학 및 생물학 무기와 연계되며, 수송기계들은 군용차량 중심으로 발전되었던 것이다.

황장엽씨의 증언을 통해서 북한의 군수부문 우대정책을 살펴보면, 첫째, 각공장 기업소는 민수부문에는 공급하지 못하더라도 군수부문에는 계획대로 최우선 공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군사재판에 회부토록 하였고, 둘째, 모든 민수공장에도 군수생산 부서를 설치하였으며, 여기에 대한 검열도 군대가 직접하고 있다. 셋째, 군수생산계획 집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당중앙위 군사위원, 정치국 상무위원, 도당 책임비서, 공장·기업소 당비서 및 지배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 총화회의」를 개최하여 실적 부진자는 직위고하에 관

83) 김광수, "북한의 경제난이 군사력 건설에 미치는 영향과 제한," 「국방학술논총」, 제1집 (1988.7), p. 436.

계 없이 문책하고 있다.[84] 이와 같이 북한은 병기생산을 특수공업 분야로 지정하여 필요물자를 우선적으로 인도한다든가, 연구개발의 우선권 그리고 군수공업 노동자의 특전을 부여해 오면서 높은 성장을 도모했다.

(2) 외부 군사기술 이용

북한은 기술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기간에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외부의 기술을 조속히 도입, 모방 및 흡수할 필요성에서 구소련을 포함한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군사기술협력을 서둘러 왔다. 1950년대 이후에는 구소련 및 중국을 포함한 공산권 국가와 주로 기술협력을 추진해 왔는데,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370여건에 달한다.[85] 구소련·중국은 우호가격(friendship price) 또는 無償으로 다량의 각종 무기 및 기술자료를 지원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지원장비의 역설계 작업 등을 통한 모방생산 및 개조생산 추진을 가능토록 했다. 북한은 구소련으로부터 T-54/55 및 T-62 전차(1960~70년대), SCUD-B(1976), T-72 전차 등을 지원 받았으며, 중국으로부터는 T-59, R급 잠수함(1970년대), SCUD-B 개량형(1970년대) 생산기술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86]

---

84) 「조선일보」, 1977.7.11.

85) 그런데 김정일은 중국의 무력을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무기 또는 무기개발 기술을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구소련의 신형무기를 얘기해도 "그런 것은 다 낡은 것"이라고 무시하면서 설명서를 보지도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황장엽·김덕홍 씨의 증언, 「조선일보」, 1997.7.11.

86) 1970~1980년대 북한이 중국과 구소련으로부터 획득한 무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9~1980년 기간중 북한의 전차 T-62가 400대 증가했으며, FROG(지대지 유도탄: Free Range Over Ground)가 1979~1980년에 30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구소련으로부터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1980년대 들어 구소련으로부터 원자력 발전소 건설지원(1986)을 받는다든가 중국과의 장기과학 기술협조에 합의(1987)하고 동구권 중심의 국제과학기술 정보센타에 가입(1987)하는 등 해외기술협력 활동을 적극 수행해 왔는데, 이는 많은 부분 군수공업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에 더해서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게 됨으로써 서방으로부터의 기술협력을 유도하는 데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전자부품이나 첨단장비 등은 주로 일본으로부터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3) 낙후된 자체기술의 효과적인 전력화

북한은 낙후된 후진기술을 응용하여 자국 실정에 맞는 전력을 생산하는 데 중점을 두어왔다. 북한은 "수령님께서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중공업을 건설하며 민족기술간부를 대대적으로 길러내며 과학기술을 자기나라의 자연적 및 경제적 조건에 맞게 빨리 발전시킬 데 대한 방침을 천명하심으로써 자체의 힘으로 자기나라의 실정에 맞게 기술혁명을 다그칠 수 있는 명확한 길을 밝혀 주시었다"[87]고 강조해 왔다. 이와 같이 북한은 과학연구사업을 김일성의 주체사상 및 자력갱생원칙에 따라 과학기술의 발전도 외부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자체의 연구인력과 독자적인 이론개발을 통해 추진해 왔으며, 연구사업의

또한 1981년부터 수미상의 SA-7 개인휴대용을 구소련으로부터 획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중국제 잠수함 Romeo Class 4척 획득(1979~1980 1척, 1980~1981 3척), FAC(Gun), FAC(Torpedo)를 중국과 구소련으로부터 각각 7척, 2척을 획득한 것으로 보이며, MIG 19, 50대(1979~1980), MIG-19, 85대(1980~81), MIG-21, 40(1982~1983) 등을 중국과 기술제휴를 통해 모방생산했거나 혹은 중국으로부터 직접 획득한 것으로 판단됨. 차영구, "북한의 중·소간의 군사협력," 이홍구·스칼라피노 공편, 「북한과 오늘의 세계」 (서울: 법문사, 1986), p. 322.

87) 사회과학출판사 편, 「정치사전」, p. 126.

중점과업도 국내원료·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이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북한의 기계공업은 중공업 우선정책과 기계공업·군수공업의 연계전략으로 그 기술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고 무기, 대형기계류 및 설비생산 부문에서 자립적인 기술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일부 평가받고 있다.[88] 북한의 분야별 독자적 군사기술기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상무기는 자체적인 생산비율 및 부품자급도가 가장 높은 무기분야인데, 소화기, 소구경 화포 등의 소재를 포함해서 완전히 자급생산 중이며, 전차와 장갑차는 부품자급률이 거의 90%에 달한다.

둘째, 해상무기의 경우, 잠수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함정을 독자건조하고 있으나 주기관과 탑재장비 등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부품자급률은 20~50%로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셋째, 항공기는 기본수리부품의 자급률이 60%에 이르며 현재 전투기의 조립생산이 가능하며 훈련기급 항공기 독자개발이 가능한 수준이며, 유도무기는 구소련 및 중국제 모방생산 경험이 많아 상당한 기술축적을 이루었고 특히 SCUD 미사일은 성능을 개량하여 자체생산과 수출까지도 실현하고 있는 상태이다.

넷째, 화생무기 및 전자통신장비들은 주로 구소련제 모방생산단계에 있다.

독자적 기술기반에서 생산된 북한무기들은 서방무기들에 비해서 기술적으로는 조잡하나 설계가 단순하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이면서 정비소요를 최소화하고 있고, 제작이 용이하며, 조작이 간편하면서 견고성과 내구성이 높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은 무기를 표준화하고, 계열화시킴으로써 구성품의 호환성을 높여 현지회수율을 증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품수의 최소화로 정비소요를 절감시

88) 김명식, "북한의 기계공업," 「월간 통일경제」 (1996.6), p. 114.

키면서 개발의 위험부담을 감소시키고 생산성과 신뢰성을 증대시켜왔다. 그결과 북한은 서방무기들에 비해 가격이 훨씬 저렴한 무기를 양산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기 생산양에 비해 질적 측면에서는 무기에 따라 열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성능부족은 집중적이고 반복되는 훈련으로 보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4) 무기수출변수 활용

북한의 무기생산은 주로 그들의 군사전략을 뒷받침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김일성의 선제기습공격에 의한 속전속결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무기를 집중적으로 개발·생산해 왔다. 동시에 무기수출을 외화획득수단으로 활용해온 측면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북한의 무기수출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89]

북한의 무기수출은 군수산업을 1970년대 후반부터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한 결과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1977년 이래 북한의 총무기수출액은 한국의 29억 달러를 능가하는 33억 달러를 기록했다. 1982년의 경우 북한의 무기수출은 절정에 달해서 그들 총수출액의 37%를 점하기도 했다. 지난 1980년대를 통해서 북한은 기술적으로는 덜 정교하지만 가격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어느 정도 신뢰할만한 주요무기생산국가로 등장했다. 이러한 무기수출의 주요 대상국들은 대부분 제3세계 국가들이었다.[90]

---

89) 북한의 무기수출에 관해서는 Michael Brzoska, "Other Countries: The Smaller Arms Producers," in Michael Brzoska and Thomas Ohlson, eds., *Arms Production in the Third World* (London: Taylor & Francis, 1986), pp. 260~264; 최종철, "무기이전 정책: 달러, 안보 및 영향력 확보," 최종철·신성택 외, 「북한의 생존정책」 (서울: 보성문화사, 1995), pp. 329~379 참조.

90)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 46개 국가와 6개 반정부 단체가 이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도 이란과 리비아를 포함한 중동국가들이 북한 무기수출의 가장 주요한 시장이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당시 북한의 대이란 무기수출은 절정에 달해 무기수출의 약 90%를 점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같은 대중동국가 무기수출을 통하여 경화(hard currency) 뿐만 아니라 대체오일 등을 확보해 왔다. 특히 무기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경화는 외국으로부터의 무기 또는 무기부품들을 구매하는 데 많이 활용되어온 것 같다.

다. 무기획득 단계

일반적으로 제3세계국가들의 무기획득방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거의 배타적으로 국내자체의 기술자와 자재를 이용하는 고유의 디자인과 개발·생산방법이 있고, 둘째, 외국제조자와 협력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면허생산이 있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기술적인 '노 하우'를 전수하고 국내자체의 자재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셋째, 무기의 비용과 질을 고려하면서 국제무기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를 직접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 정치적 목표를 주로 고려하는 정치권은 위에서 지적한 순(자체생산 → 면허생산 → 완제품 구입)을 선호하는 반면, 정치적·경제적 독립과 같은 정치적 목표 이전에 무기의 비교적인 화력과 성능에 더욱 관심을 갖는 군부는 적시에 필요로 하는 무기를 바로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군부가 선호하는 무기획득 방안은 앞서 지적한 순서의 역순(완제품구입 → 면허생산 → 자체생산)이 될 수 있다.

· 자체생산은 완전한 정치적·경제적 독립을 약속할 수 있는 것이나 대신 질과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는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자체 무기생산의 경우 설계→개발→생산 및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의 소요로 말

미암아 생산·공급되는 무기들은 이미 낙후된 것일 수 있다. 반면 완제품 구입은 가장 최신의 성능이 뛰어난 무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면허생산은 완제품구입과 자체생산으로 제기되는 결점들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면허생산은 자체무기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에 더해서 기술 '노 하우'가 이전되고 국내 자체의 자재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면허생산은 궁극적으로 무기생산 '자주화'를 이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면허생산은 단점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면허생산에서는 설계도가 직접적으로 외국 생산자에 의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무기의 설계·개발에 있어서 충분한 경험과 훈련을 쌓은 자체의 과학자나 기술자를 배출할 수 없다는 한계성이 있다. 물론 면허생산과정에서 자체의 기술자들이 어느 정도의 기술적 '노 하우'를 획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결코 국내의 기술적 독창성을 충분히 이끌어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91]

북한의 경우 앞에서 밝힌 것처럼 무기의 질이나 성능이 서방의 것에 비해 다소 떨어지더라도 정치적·경제적 독립을 약속해주는 자체의 무기생산 노력에 주력해 왔다. 특히 김일성은 일찍부터 무기의 자체생산을 강조해 왔다. 그는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무기를 만들어 무장하여야 한다"라는 제하의 65호공장 대표들과 한 담화에서 자체의 무기생산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물론 우리는 무기를 국내에서 만들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사올 수도 있습니다. 털어놓고 말하여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총은 원가가 많이 먹히기 때문에 자체로 총한자루 만드는 값이면 다른나라에서 총을 여러자루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를 다른나라에서 사오

91) Neuman, "Defense Planning in Less-Industrialized States," pp. 255~256.

는 것은 국방에서 안전하지 못합니다. 무기는 다른나라에서 주다가도 못줄 수 있고 또 안줄 수도 있습니다. 다른나라에서 무기를 주겠다고 할 때에는 빚을지고라도 사올 수도 있지만 안주겠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에는 손을 털고 빈손으로 가만히 앉아있을 수 밖에 딴도리가 없지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자체의 힘으로 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실정에 맞는 무기를 만들 수 있으며 나라를 안전하게 보위할 수 있습니다."[92]

그렇지만 북한은 그들의 선진 산업기술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외부의 지원없이 완벽하게 자체적으로 무기생산을 추구하는 데는 한계가 많았다. 따라서 북한이 궁극적으로 자체무기생산을 지향하면서도 결핍된 개발·생산기술을 외국으로부터 전수받아서 이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자체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까지 어떻게 무기를 획득해 왔는지를 그들의 군수산업 발전추세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군수산업 발전 단계를 완제품 면허조립 단계(Licenced Assembly Stage), 구성품 면허생산 단계(Licenced Component Productions Stage), 완제품 면허생산 단계(Licenced System Production Stage), 역설계 모방생산 단계(Reverse Engineering/Modification Stage), 의존적 연구개발 및 생산 단계(Dependent R & D and Production Stage), 독자적 연구개발 및 생산 단계(Independent R & D and Production Stage) 등과 같이 6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93] 북한의 군수산업 발전추세를 이같은 6단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92)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56.4.23)," 「김일성저작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p. 294~295.

93) James Everett Katz, *Arms Produ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n Analysis of Decision Making* (D.C. Heath and Company, Lexington, 1984) 참조.

(1) 완제품면허조립 단계

완제품 면허조립 단계(Licenced Assembly Stage)는 제3세계 국가들이 군수산업을 육성할 때 거치게 되는 첫번째 기술적 단계로서 자국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이나 제3세계국가들 중 先發軍需産業 추진국가의 군수산업체와 면허계약을 체결하여 완제품을 조립·생산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완성된 형태로 수입되므로 조립에 필요한 시설 투자 및 조립기술을 비롯한 설비의 설치관리, 제품검사, 제품조사 및 시제품의 사용에 대한 기술자의 기술축적 정도에 머물 뿐 새로운 생산기술 축적은 전무하다. 북한의 경우 대부분의 무기생산은 이러한 단계를 훨씬 넘어선 상태있다고 판단된다.

(2) 구성품 면허생산 단계

구성품 면허생산단계(Licenced Component Productions Stage)에서는 군수산업을 추진하는 국가에서 조립·생산하던 일부 구성품들을 공급선과의 계약을 통해 자국에서 생산하게 되며, 제품의 생산기술의 점차적인 축적에 따라 생산품목의 범위확장 및 장비의 국산화 비율의 증가가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는 자국의 수요 충족 이외의 잉여생산품이 생겨날 수 있으며 이것들은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에서 오는 가격우위를 바탕으로 한 역수출이 가능해진다. 북한에 있어서, 공중무기인 헬기 MI2(혁신2호)와 훈련기 YAK-18 등은 조립생산단계에 있으나 헬기의 경우는 60%의 부품자급률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헬기 MI-2의 독자설계 개발기술은 미흡하나 항법전자장비의 자

체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연간 생산능력은 20대 전후이며 1981년 후의 연평균 생산은 11대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94]

(3) 완제품 면허생산 단계

면허생산의 본 괘도 진입과 더불어 충분한 기술축적이 이루어 지면 완제품 면허생산이 시도된다. 이 단계에서는 자국내의 완전한 생산라인 구비하에 턴키 방식의 플랜트(Turn-Key Based Plant) 수입 및 소프트 웨어(Soft Ware)의 제공 등과 같은 선진국의 기술지도를 통해 완제품을 생산한다. 단 고도정밀을 요구하는 주요 핵심부품은 국산화하지 못하고 선진국 공급선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 놓여있는 북한 생산무기는 분명하지 않다.

(4) 역설계 모방생산 단계

역설계 모방생산 단계(Reverse Engineering/Modification Stage)는 구성품과 완제품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게 되면 선진국의 장비를 분석하여 자국의 환경이나 여건에 맞도록 역설계하여 모방생산하는 단계를 지칭한다. 이 단계를 거치면서 선진국의 기술지도에 의존하여 생산하던 제품의 구성품이 상당수가 수정·보완되면서 독자적인 개발·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북한에서 생산되고 있는 대부분의 무기들이 이러한 기술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북한은 현재까지 T-62 전차, M 1985 전차 등을 생산해 오고 있는 데, T-62의 경우 소련제 모방생산이 가능하고, 소요기술수준면에서 모방설계

94) 장명순, "북한의 군편제와 무기체계," 「북한연구」, 제3권 제3호 (1992 가을), pp. 88~89.

가 가능한 상태이며 일부 정밀부품을 제외하고는 차체, 포신 등의 자체제작이 가능하다. 부품의 국산화율은 90%를 상회하고 있다.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기술은 특수 신형장갑재질(세라믹 등), 베아링, 엔진노즐 등의 정밀부품들인데 그것은 중국 그리고 구소련으로부터 도입해 왔다. 특히 전자 및 사격통제분야가 낙후되어 있어 대부분 해외기술에 의존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자주포 중심(60%)으로 견인포, 자주포 등과 함께 야포를 생산해 오고 있다. 소구경 야포는 자체 생산되고 있으나 대구경 자주포는 소련제의 모방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자적 모델개발 및 성능개량 등에 대한 기술에는 미치지 못하여 소련제 야포를 모방설계하는 상태에 있으나 소재를 포함한 전요소의 기술은 자체 제작이 가능한 수준이다. 부품의 자급율은 100%의 수준이다. 107mm, 122mm, 200mm 방사포 역시 모방생산되고 있다(107mm의 경우는 중국제품을, 122mm, 200mm의 경우는 소련제를 각각 모방생산). 그러나 특수설계 및 특수소재 개발기술을 제외하고는 방사포 설계·제작까지도 가능한 상태이다. 부품의 자급율도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로케트의 경우는 100%이다.[95] 기타 지상무기인 대공화기 및 대전차화기 역시 소련제 모방생산에 머물고 있다.

(5) 의존적 연구·개발생산 단계

의존적 연구·개발생산 단계(Dependent R & D and Production Stage)는 자국에 소요되는 무기체계를 선진국의 부분적 기술지도하에 독창적으로 자체 연구·개발생산하는 단계이다. 북한의 소화기, 탄약, 장갑차, 소형잠수함, 고속정, 훈련기급 항공기, 스커드-B, C 및 일

95) 위의 논문, p. 89; 최성빈, "북한의 방위산업 현황," 「북한연구」, 제3권 제3호 (1992 가을), pp. 110~112 참조.

부 화학무기 등이 의존적 연구개발생산 단계에 와있다고 볼 수 있다. 장갑차의 경우 소련제 및 중공제의 성능을 개량하여 자체생산하고 있으며, 부품 자급율은 90%에 이른다. 고속정은 자체개발하고 있기는 하나 주기관 및 탑재장비는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부품 자급율은 저조한 편이다. 훈련기급 항공기의 기체제작 분야는 상당한 기술축적이 된 것으로 판단되나 항법·전자분야는 낙후된 상태에 놓여 있다. 스커드 미사일의 경우 유도탄 기구물, 추진체 등의 핵심 부분인 전기·전자 장비를 제외하고는 자체제작이 가능하다고 전해지고 있다. 화학무기는 공격무기 및 방어장비의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자체생산이 가능하다고 한다.[96]

(6) 독자적 연구·개발생산 단계

독자적 연구·개발생산 단계(Independent R & D and Production Stage)는 군수산업에 대한 완전한 연구·개발능력을 갖추고 있는 단계를 지칭한다. 이 단계에서는 자국의 군수산업 육성목표와 체계에 적합한 장비의 독자설계가 가능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부품들과 이와 관련한 통합체계(Integrated System)까지를 생산해낸다. 북한은 무기생산 분야에 있어서 고도정밀기술을 요하는 이 단계에 아직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6) 황진환, "북한의 군사력 건설기조와 군비통제 방향,"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95~'96 북한 군사능력 평가(1)」 (1995.10), pp. 26~35.

3. 배치계획

가. 전방지역 전진배치[97]

북한은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선제기습 공격 및 속전속결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육·해·공군의 대부분을 전방지역에 전진 배치시켜 놓았다. 따라서 북한 지상군은 부대의 조정이나 재배치 없이도 즉각 공격이 가능한 준비상태에 놓여있다. 실제로 10여개 군단과 60여개 정규사단 및 여단이 평양과 원산을 잇는 평원선 이남 전방지역에 전진 배치되어 있다. 동부전선과 중동부 전선에는 제1군단과 제5군단이, 그리고 서부전선과 중서부전선에는 제4군단과 제2군단이, 중부 및 평양지역에는 4개 군단(제3,7,12군단, 부대명칭 미확인 군단)과 평양방어 사령부, 후방지역에 4개 군단(제6,8,10,11군단)이 각각 집중 배치되어 있다. 기동화군단의 경우 평원선 이남 중심지역에 5개 군단(806, 815 기계화군단, 820 전차군단, 620 강동포병군단)과 후방지역에 2개 군단(425·108 기계화군단)이 배치되어 있다.

북한해군의 경우, 해군사령부 예하 동·서해 함대가 양분되어 있으며, 서해함대사령부 6개전대, 동해함대사령부 10개 전대로 편성되어 총16개 전대가 배치되어 있다. 동해함대사령부는 약 470여척, 서해함대 사령부는 약 340여척의 함정보유량을 보이고 있다. 이들 함정은 경비함, 유도탄정, 어뢰정, 화력지원정 등 수상전투함정 약 430여척, 잠수함 40척(소형잠수함 14척 포함), 상륙함, 공기부양정 등 지원함 340여척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약 60%의 함정이 전방지역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97) 북한군의 배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89년, 1991~1992년, 1996~1997년, 1997~1998년판의 내용을 참조.

북한공군은 제트기지, 비제트기지, 비상활주로 등 총 30여개의 항공기지를 보유하고 있고 그 중 30여개 기지에 항공기를 분산 배치하고 있다. 특히 전선에 비교적 가까운 전방기지와 평양권에는 주력전투기들을 배치(전투기의 50%를 전방지역 전진 배치)하고 있어 현기지에서 발진하여 우리나라 전지역에 대한 기습공격이 가능하도록 해 놓았다.

나. 외세개입 억제를 위한 전략무기 배치

북한은 대남 군사적 공격시 2개의 戰場을 동시에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자체내의 戰場과 駐일본 미군기지와 미국본토에서 발진하게 될 미국의 군사적 개입차단을 위한 戰場이 그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지금까지 한결같이 추구해온 대남군사적 혁명전략을 달성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해온 것이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한편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군의 개입을 억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수단을 개발·배치하는 노력을 집중해왔다.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배치는 일차적으로 대남한 군사적 공격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동시에 미군의 개입억제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배치는 주로 후자의 목적을 위해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있다. 일본의 中川八洋 교수는, "「로동1호」가 북조선에 배치되면 그 모든 것이 일본만을 표적으로 하는 미사일"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그는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은 대충 말하면 최대사정 거리의 20~30% 정도밖에 거리의 하향조정을 할 수 없으므로 만일 최대 사정이 정확하게 1천km라면 대개 7백~1천km가 공격범위가

된다"고 하면서, 「로동 1호」는 "한반도 북단(압록강)부근에서 발사한다고 해도 쓰시마 해협(한국해협)의 멀리까지 가며 한국의 영토내를 거의 표적으로 삼을 수"없기 때문에 결국 일본만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라 주장했다.[98]

이 주장은 「로동 1호」의 대일본 위협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일본 자체의 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군사적 외세개입 차단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해 볼 때, 「로동 1호」는 주일미군기지를 사정목표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시 미국 또는 미·일연합으로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감행한다면 북한은 전략미사일로 일본 본토는 물론이고 주일미군기지를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황장엽 씨도 "북한은 남침시 미국의 개입을 방지하고자 화학무기가 장착된 장거리 미사일로 '일본을 초토화'시키겠다고 위협할 것"[99]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북·미 미사일 회담의 미 국무부 차관보 로버트 아인혼은 북한이 사거리 1천km와 1천3백km의 노동 미사일 개발을 상당히 진전시켰다고 말하면서 이 미사일은 "일본과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100]

그런데 북한의 이러한 중·장거리 미사일이 실전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101] 다만 한국 국방부의 분석에 의하면

98) 中川八洋, "로동 1호 요격할 수 있는가," 통일원 자료조사실, 시사정보 93~20 (1993.10), pp. 1~2.

99) 「중앙일보」, 1997.7.10.

100) 「중앙일보」, 1997.9.21.

101) 일본 NHK가 일본과 미국의 군사 및 정보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북한이 일본 영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정거리 1천km 이상의 노동 1호 미사일을 실전배치"했으며, 배치장소는 "북한의 북서부 지역"이라고 보도한 바 있기는 하지만, 이 보도의 신빙성이 아직까지 문제로 남아있다. 「조선일보」, 1997.9.22.

최근 화학무기와 핵무기의 탑재가 가능하고 사정거리 1,000Km 이상인 노동 1호의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작전배치 단계에 와있다고 한다. 또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1,2호의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데, 대포동 1,2호 장거리 탄도 미사일은 사거리가 각각 1,500km, 4,000km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102] 만약 3,500km 이상의 사거리 대포동 미사일이 실전배치된다면, 북한은 극동지역 일대에서 지역적 세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이 한국군을 돕고자 할 때 태평양의 미군을 이 미사일로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103]

4. 선언적 계획

김일성 부자를 포함한 북한 지도부가 그들의 국방목표라든가 국방관련 정책을 공식적으로 어떻게 밝혀 왔으며, 그것은 어떠한 목표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가. '제국주의 침략' 저지를 위한 '자위의 방침'

김일성은 "전쟁은 그 본질에 있어서 특별한 폭력수단에 의한 어떤 계급의 정책의 연장"이라 하면서 "전쟁에는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이 있고 침략전쟁과 해방전쟁"이 있다고 했다.[104] 북한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해방전쟁을 정의의 전쟁으로 선전해 오고 있다. 북한에 따르면 정의의 전쟁은 사회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102)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7~1998」, pp. 56~57.
103) *Jane's Defense Weekly*, 1994.3.19.
104) 사회과학출판사 편, 「정치사전」, p. 744.

반해, 부정의의 전쟁은 세계의 재분할을 위하여 판매시장과 원료공급지와 투자권을 위하여 제국주의자들 사이에서 진행되는 전쟁이며 계급적 해방을 위한 근로대중의 혁명운동을 반대하며 자기의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식민지 및 예속국가 인민들을 반대하는 전쟁으로서 사회발전을 가로 막는다고 했다. 북한은 그들의 6.25 남침전쟁을 해방전쟁으로 규정하고 정의의 전쟁의 가장 훌륭한 전형으로 치부하면서 피압박인민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제국주의침략자들에 항거하여 투쟁하는 것은 그들의 빼앗을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전쟁일반을 반대할 수 없으며 정의의 전쟁은 반드시 지지하고 적극수행해야 한다고 했다.[105]

현재 북한은 정의의 전쟁대상으로 '미제국주의'를 꼽고 있다. 즉 그들은 현시기 전쟁의 근원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의 침략적, 약탈적 본성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한을 강점하고 남한을 전초기지로 삼아 또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려고 발광하고 있다고 하면서,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를 지구상에서 영원히 쓸어버리기 위한 '반제반미투쟁'을 떠나서는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북한 당국의 한결같은 주장이다.[106] 또한 북한은 미제국주의의 위협에 더해서 일본군국주의의 위협을 동시에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투쟁을 독려하기도 했다. 일본군국주의의 위협에 대해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본군국주의의 해외남침에서 우리나라는 그 첫번째 공격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미 남조선에 기어들기 시작하였으며 미제의 조정 밑에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극히 모험적인 전쟁계획을 짜놓고 조선전선에 자기들의 침략무력을 투입할 데 대한 모략

105) 위의 책, p. 744.
106) 위의 책, p. 745.

을 공공연히 꾸미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작전지역으로까지 선포하였습니다."[107]

북한의 자위적 군사방침을 역설하면서 전쟁대비태세를 강화해 온 것은 바로 이러한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해 왔던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남침의 위협이란 있어 본적도 없으며 또 있을 수도" 없다고 강변하면서 오늘날 그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끊임없이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있는 근원이 바로 미제침략군대가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침략과 전쟁정책을 추구하는 데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뻔한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저지키 위해 "전체 조선인민들이 한결같이 일떠서야"[108] 한다고 부추켜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남침을 위한 과도한 무력건설이라는 대내외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과도한 군사적 동원체제 유지를 통한 체제공고화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미·일 제국주의 또는 군국주의'의 위협에 대한 방어적 군사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혀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강화하기 위한 북한의 '평화주의' 주장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선언적 군사계획 중 하나다.

나. '평화주의': '비핵평화주의'와 군비축소

북한은 김일성의 현명한 영도 밑에 '반제반미 투쟁'의 불길속에서 평화전취의 모범을 보여 주었으며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선전해 왔다.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북한의 선언적 평화관을 잘 읽을 수 있다.

---

107) "최고인민회의 제4기 5차회의 허담외무상 보고 (1971.4.12)," 평화연구원 편, 「북한군사문제 제의 자료집(1948~1988)」 (서울: 평화연구원, 1989), p. 314.
108) 위의 책, p. 314.

"우리 나라는 평화애호적인 사회주의 나라이며 우리 인민은 평화를 열렬히 사랑하는 인민입니다. 우리는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본질로부터 출발하여 시종일관 평화를 주장하며 평화를 유지 공고화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109]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북한의 평화개념은 선의가 전제된 번영, 친선, 협력 등과 같은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서방측의 평화개념과는 다른 것이다. 북한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국가에 대해서 평화와 선의를 베푸는 것은 오히려 자본주의 국가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되며 결과적으로 공산주의의 최후의 승리를 저해한다고 보고, "오직 평화의 파괴자(제국주의)들을 반대하여 억압자들의 통치를 뒤집어 엎어야만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110]고 강조해 왔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 말하는 진정한 평화는 곧 제국주의와의 전쟁 또는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새전쟁 도발자(제국주의)들을 반대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식민지 및 예속국가들에 대한 미제의 내정간섭을 중지시키고 군비 및 병력을 축소하며 원자무기를 금지하고 평화를 옹호하는 투쟁을 벌릴 것을 당면한 투쟁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떨쳐 나설 것을"[111] 선언적 차원에서 강조해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실제로 김일성은 "국제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반전평화옹호운동을 힘있게 벌려야"[112]한다고 주장했으며, "세계의

109)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1970.11.2)," 「김일성저작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p. 474.

110) 사회과학출판사 편, 「정치사전」 p. 483.

111) 박태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79.

112) 김일성,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장덕순·리준항 공저, 「자주시대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8: 세계혁명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문제는 제국주의자들의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중지시키고, 완전한 군비철폐를 실현하는 것"[113]이라 천명한 바 있다.

동시에 북한은 이러한 대내외적인 평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반핵 평화주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핵의 평화적 이용' 등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오기도 했다. 김일성은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세계 여러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넓혀나가야"[114]한다고 하면서 "조선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세아지역에서 열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려면 이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여야"[115]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들의 반핵운동을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장으로 구체화해 나가기 시작했다.[116]

이때부터 북한은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장을 기반으로 반핵운동을 국제화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그들의 반핵평화 이미지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다. 먼저 1978년 일본 사회당과 「동북아 비핵·평화지대」 창설에 합의하는가 하면,[117] 1970년대 말까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와 세계 비핵·평화지대 창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중국과 구소련은 물론이고 제3세계의 호응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여세를 기반으로 1980년대 전반에 걸쳐 북한은 「한반도 비

위대한 령도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8), p. 282.

113) 위의 글, p. 283.

114)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1980.10.10)," 「김일성저작집 3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368.

115) 김일성, "일본 정치리론 잡지 ≪세까이≫ 편집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85.6.9)," 「김일성저작선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p. 269~270.

116) 1976년 8월 12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한국문제 긴급국제회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평화연구원 편, 「북한군사문제 제의 자료집 1948~1988」, p. 35.

117) 「讀賣新聞」, 1978.12.21.

핵지대화」로 구체화된 반핵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1981년 3월 평양에서의 북한과 일본 사회당과의 「동북아 비핵·평화지대」 창설을 위한 공동노력 선언, 1982년 2월 일본 사회당에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비핵·평화지대 창설과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대회」 개최 제의, 그리고 1986년 9월 친북한 제3세계를 중심으로 한 80여개국 125개 대표들을 초청한 「한반도 비핵·평화지대를 위한 평양 국제회의」 개최 등은 북한의 반핵운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되었는가를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1970년대 말까지 이러한 비핵지대화 주장을 주로 정치선전적 차원에서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인 비핵지대화 주장으로 확장시켜 나감으로써 구소련 및 중국 그리고 제3세계 비동맹국가들로부터의 지지를 획득하고 세계적 차원에서의 북한입지를 강화하는데 이용해 왔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북한은 기존의 비핵지대화 주장을 「한반도 비핵지대화」로 그 범위를 좁혀 한반도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전략적 이득을 유도해 내고자 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장을 통해서 주한미군 및 핵무기 철수를 실현시키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주한미군 보유 핵철수에 대비한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118]

그러나 북한이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같은 제의를 통해서 "세계평화위업 앞에 지닌 중대한 사명감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한반도의 미군핵 철수를 유도하고 자체 핵무기 개발에 대한 외부의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수단으로 「비핵평화주의」운동을 이용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118) 송영선, "한반도의 핵," 「신동아」 (1991.6), p. 216.

또한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상호감군·상호군축을 주장함으로써 평화공세를 펼쳐왔다. 쌍방감군안은 1954년 6월 15일 제네바 최종회의에서 북한의 남일 외상이 제안한 이래 오늘날까지 기회있을 때 마다 제시되 온 것으로서, 새로 제안될 때 마다 조금씩 달랐다. 예를 들면 1956년 5월 31일까지 북한이 일방적으로 인민군 8만명을 감군한다고 발표했었고, 1957년 9월 20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일성이 연설할 때는 남북한 쌍방이 모두 군대를 10만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119] 마찬가지로 북한은 1987년 7월 남북한 군대의 10만명으로 감축,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등을 포함한 「단계적 무력 감축 제안」을 발표했다. 1988년 11월에 북한은 1991년 말까지 남북한 병력의 10만명으로의 감축과 함께 3단계 주한미군 철수, 남북한 및 미국간 3자회담, 남북한간 고위정치·군사회담 개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를 위한 신뢰구축 방안 등에 관한 「포괄적 평화방안」을 제안하였다. 1990년 5월에 와서는 남북한이 3~4년 동안 3단계(30만, 20만, 10만)로 나누어 동일 수준으로 동시에 병력을 감축하자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북한의 이러한 군사제안 역시 상당히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한국이 수락할 수 없는 전제조건을 동시에 부가함으로써 한국이 자연히 거부하게 만들어 그들의 평화 이미지 제고만을 노리는 노력의 일환으로 치부되고 있다.

---

119) 이상우, 「한국의 안보환경」, 제2집 증보판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1986), p. 465.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계를 대내외적 요인, 국방계획 결정체계의 특성과 산출된 주요 국방계획(운용, 획득, 배치, 선언적 계획)들을 중심으로 분석·평가해 보았다. 여기에서 북한의 국방계획결정체계는 김일성·김정일 중심의 사적 결정체계와 같은 특성을 띠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즉 북한의 군대는 그들이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수령의 군대, 인민의 군대, 당의 군대'라기 보다는 김부자 개인의 사병집단과 같이 취급되어 왔다. 따라서 북한의 국방계획은 문자 그대로 국가방위를 위한 계획이라기 보다는 김부자 개인정권의 보호와 확대를 위한 사적 군사계획의 성격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김부자가 당·정·군 차원의 최고직무인 당중앙위군사위원장, 국방위원장, 최고사령관직을 보유하면서, 이러한 직무의 이름으로 모든 국방관련 결정을 독점해왔다. 물론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총참모부, 작전국 등 군사관련 실무기구가 조직되어 있으나 이들 기구에서 수립되는 세부 국방계획들은 김부자의 명령이나 기본지도방침을 벗어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결국 북한의 국방계획은 김일성·김정일의 군사지도 명령 및 방침, 군사사상, 군사전략·전술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계획까지 수립·결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김부자, 특히 김일성의 북한 자연조건,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및 남한으로까지 정권확대를 위한 정치적 목표, 그리고 대외적 위협에 대한 인식이 북한의 국방계획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평가된다. 김일성의 한반도 특수지형과 기후를 고려한 전략·전술이나, 소국이 지닌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고슴도치형' 군사방어계획, 대남무력적화통일의 정치적 목표 달성과 주

변 강대국(미·일과 중·소사회주의 강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 억제 또는 정치적 독립성을 견지하기 위한 '자주적' 국방건설 계획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의 주요 국방계획인 운용계획, 획득계획, 배치계획, 선언적 계획들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첫째, 북한은 김일성의 대남무력적화통일이라는 정치적 목표 달성과 주변 강대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 또는 정치적 독립성 견지라는 차원에서 '소국 대 소국형'이 아니라 '소국 대 강대국형'의 군사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해 왔다. 북한의 군사참여비율(MPR)을 극대화한 대병주의, 핵무기, 생화학무기 및 중장거리 미사일과 같은 전략무기개발, 전시형국가관리체제를 상시적으로 운영·유지하는 전쟁준비성,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소모전을 피하기 위한 게릴라전과 같은 전격적이고 단기적인 전략·전술 등은 그들의 '소국 대 강대국형' 운용계획의 실체라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무기획득 기조는 김일성 주체사상의 군사적 표현인 자위노선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군사과학기술을 자주화하는 데 있다. 따라서 북한은 군사우선이라는 개발전략을 추진해오면서 낙후된 자체기술의 한계속에서도 이를 효과적으로 전력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동시에 북한은 낙후된 기술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부군사기술을 조속히 도입·모방하고 흡수함으로써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무기자주화를 달성했다. 또한 북한은 무기수출 전략을 강화해서 경화를 벌어들임으로써 외국으로부터 필요한 대체무기 또는 부품을 구매하는 데 활용해온 것 같다.

셋째, 북한의 군사배치계획은 직접적인 대남공격태세를 위한 전방지역 전진배치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억지하기 위한 중·장거리 전략무기 배치로 특징지워진다. 북한은 비무장지대를 광범위한 지하시설물로 요새화해 놓았으며, 지상군의 65% 이상을 평양과 비무장지대

사이에 배치해 놓고 있다. 해군은 동서해안을 방어하면서 남한에 대한 기습공격 지원태세를 갖추고 있다. 군사장비나 군수산업시설은 대부분 지하화해서 보호되고 있다. 폭격기, 대공방어장비 및 지대공 미사일 등은 대공방어 또는 공격을 위해 배치되어 있다. 이같이 북한의 군사배치계획은 한편으로는 남한과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남기습공격 감행을 용이하도록 하는 기본원칙하에 수행되온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은 SCUD의 증강배치 준비와 함께 노동 1호 미사일의 작전배치를 준비해 옴으로써 대미·일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전략을 지속시키고 있다.

넷째, 선언적 차원에서 북한은 김일성의 '제국주의 침략' 억지를 위한 '자위의 방침'이라는 명목하에 과도한 군사대비태세를 구축해 오면서 동시에 군비축소 및 비핵평화주의를 포함하는 '평화주의' 주장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이중정책을 구사해 오고 있다. 북한은 남침을 위한 과도한 무력건설이라는 대내외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과도한 군사적 동원체제 유지를 통한 체제 공고화를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미·일 제국주의 또는 군국주의'의 위협에 대비한 방어적 군사계획을 강조해 왔으며, 이에 더하여 비핵지대 평화지대 창설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 반전, 반핵, 평화옹호운동 등을 고조시킴으로써 북한의 공격적인 군사정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시키고자 했다.

그런데 북한의 이러한 '소국 대 강대국형' 국방계획 추진이 지나치게 오래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북한은 식량난을 비롯한 총체적인 경제난을 자초하게 되었다. 특히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그동안 북한이 제한적으로나마 의존해왔던 공산권으로부터의 지원 또는 원조가 중단되는 상황에 처함으로써 그들의 경제난은 더욱 심화되었다. 향후 중·단기적으로 북한이 이러한 경제난에서 벗어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 정권을 승계한 김정일

이 막대한 경제력 집중을 필요로 하는 '소국 대 강대국형' 국방계획을 취소하거나 완전히 변화시킬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황장엽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일은 "조국통일의 주력은 군대다. 믿을 것은 군대 뿐이다. 모든 힘을 다해 군대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수시 하달해 왔다고 한다.[120] 이를 감안할 때, 향후 김정일의 군사력에 대한 의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김정일은 경제난이라는 엄연한 현실에 처해있는 만큼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먼저 북한은 새로운 군사장비를 건설·보강하는 것보다 기존의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군사운용계획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그들의 높은 군사참여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치·사상적 훈련강화와 함께 비용이 덜드는 모의훈련을 증가시켜나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북한은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을 위해 군사기술·과학을 발전시켜 새로운 무기획득을 위한 계획을 꾸준히 추구해 나갈 것이지만, 이것 역시 경제력의 저하로 '저경비, 고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는 무기개발에 집중될 것이다. 북한은 우선적으로 주체사상에 의거하여 낙후된 자체기술의 효과적인 전력화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

동시에 향후 경제력을 바탕으로 성능이 더 좋은 무기를 생산하거나 구입할 능력을 지닌 남한에 대한 군사력의 열세 가능성을 모면하기 위해서 북한은 자신의 군사력을 외교적으로나 심리 전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 획득노력을 강화하려 들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은 미사일을 비롯한 전략무기 개발에 있어서는 남한을 앞지르면서 상당한 정도의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들은 대미·일 군사외교를 위해서 중요한 지렛대로 사용될 수 있는 효용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120) 「조선일보」, 1997.7.10.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언제든지 한국과 미국에 핵공갈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 조차도 갖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지렛대를 수단으로 해서 의도적으로 비합리적인 군사행태를 보이거나, 테러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호전성을 시위함으로써 그들의 외교·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려 할 것이다.[121] 즉 북한은 의도적인 '비합리성'(irrationality)의 행태를 적절하게 구사함으로써 한·미군사 동맹의 약화를 기도하거나 한·미연합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해 나가고자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 향후 군사적 테러활동, 남한 영역에 대한 군사적 침범, 미사일 및 화생무기위협, 핵공갈 등과 같은 전략을 보다 활성화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북한은 이같은 공세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존에 유지해 왔던 군사력의 전방지역 전진배치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발간된 한국의 「국방백서」는 북한의 지상군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방지역 내 주요 도시와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 170mm 자주포와 240mm방사포를 계속 생산·배치함으로써 현재 전방지역에 170mm 자주포 350여문과 240mm방사포 250여문이 각각 추가배치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바,[122] 이는 북한의 전방지역 배치강화 의지를 잘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향후 북한은 선언적 차원에서 주한미군 철수요구와 함께 남북한 군축을 더욱 강력히 주장하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현재 처해있는 경제난은 그들의 실질적인 군사력 건설을 제한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반면 남한은 비교우위에 있는

121) Edward A. Olsen, "Security Dynamics in Northeast Asia: An Evalution of North Korean Military Threat toward South Korea," 「북한의 변화전망과 대응 안보전략」 (육군사관학교 제9회 화랑대 국제 심포지엄 논문집, 1997.10.24) pp. 9~16.

122)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7~1998」 p. 57.

경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능가하는 군비증강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조만간 북한이 남북한의 군비경쟁에서 열세를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남한의 군비증강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실질적인 남북한 군축주장을 펴고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김정일 정권하에서 남북한이 신뢰를 구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군축주장은 대남심리전술 차원의 '평화공세'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김정일 체제하의 북한은 김일성 생존때와 마찬가지로 군사적 수단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체제유지 방안을 고수하게 될 것인 바, 북한의 공세적 성향의 국방계획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국토통일원. 「南北韓國力趨勢比較」. 서울: 국토통일원, 1979.

김균태 엮음. 「안경없는 군대 이야기」. 서울: 의암출판, 1993.

김일성.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6~1997」. 서울: 국방부, 1996.

_____. 「국방백서 1997~1998」. 서울: 국방부, 1997.

_____. 「일본방위요람」. 서울: 국방부, 1985.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 경제지표 편람」.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_____.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박태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방문권·허종호 공저. 「자주시대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4: 혁명무력의 위대한 령도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8.

사회과학출판사 편.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서원식. 「북한전략사상신론」. 서울: 도서출판 한원, 1990.

안보문제연구소. 「무기체계의 발전과 군사전략」. 서울: 안보문제연구소, 1981.

이상우. 「한국의 안보환경」. 제2집 증보판.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1986.

정진위. 「북방3각관계」. 서울: 법문사, 1985.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63」.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3.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서울: 통계청, 1995.

통일원. 「남북한 경제지표」. 서울: 통일원, 1993.

평화연구원 편. 「북한군사문제 제의 자료집 1948~1988」. 서울: 평화연구원, 1989.

하영선. 「韓半島의 核武器와 世界秩序」. 서울: 나남, 1991.

한국은행. 「1993년 북한 GNP 추정결과」. 서울: 한국은행, 1994.

한스마르츠키 지음. 정경섭 역. 「兵營國家 북한」. 서울: 동아일보사, 1991.

北韓研究所 編. 「北韓總覽」. 서울: 北韓研究所, 1994.

鄭光河. 「일본방위정책의 이상과 현실」. 서울: 慶南大學校 極東問題研究所, 1989.

崔周煥. 「北韓 經濟論」. 서울: 대왕사, 1992.

Appleman, Roy E.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Yalu.* Washington, D.C.: GPO for U.S. Army, 1961.

Collins, John M. *The Force Planning Faculty.* Washington, D.C.: US GPO, 1990.

Handel, Michael. *Weak Stat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London: Frank Class and Company Limited, 1981.

Katz, James Everett. *Arms Produ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n Analysis of Decision Making.* D.C. Heath and Company, Lexington, 1984.

Schnabel, James F.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Policy and Direction.* Washington D.C.: GPO for U.S. Army, 1972.

U.S. CIA.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8.

2. 논 문

김광수. "북한의 경제난이 군사력 건설에 미치는 영향과 제한." 「국방학술논총」, 제1집 (1988.7).

김명식. "북한의 기계공업." 「월간 통일경제」 (1996.6).

김일성.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1967.12.16)." 「김일성저작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_____.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장덕순·리준항 공저. 「자주시대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8: 세계혁명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령도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8.

_____. "우리 인민군대를 혁명군대로 만들며 국방에서 자위의 방침을 관철하자(발취) (1963.10.5)." 「김일성저작집 1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_____. "인민군대의 간부화와 군종, 병종의 발전전망에 대하여(발취), (1954.12.23)." 김일성.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_____. "일본 정치리론 잡지 ≪세까이≫ 편집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85.6.9)."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_____.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4년 2월 27일)." 「김일성저작집 1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_____.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56.4.23)." 「김일성저작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_____.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70.11.2)." 「김일성저작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_____.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1980.10.10)." 「김일성저작집 3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_____. "조선인민군창건 스므돐을 맞이하여 (1968.2.8)." 「김일성저작집 2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_____.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1966.10.5)." 「김일성저작집 2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김철만. "현대전의 특성과 그 승리 요인." 「근로자」, 제8호 (1976).

김철환. "북한의 과학기술수준." 「신동아」 (1990.12).

남궁영. "남북한 경제력 비교연구." 「통일연구논총」, 제2권 제2호 (1993).

박웅서. "북한의 군사정책과 경제: 북한의 경제력과 군사목적 수행능력." 박웅서 외. 「북한군사정책론」. 서울: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1983.

송영선. "한반도의 핵." 「신동아」 (1991.6).

이규열. "남북한 군비경쟁의 형태 및 동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7).

이기택. "북한군사정책과 정치." 박웅서 외. 「북한군사정책론」. 서울: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1988.

이종학. "북한의 군사정책과 전략." 박웅서 외. 「북한군사정책론」. 서울: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1983.

장명순. "북한의 군편제와 무기체계." 「북한연구」, 제3권 제3호 (1992 가을).

차영구. "북한의 중·소간의 군사협력." 「북한과 오늘의 세계」. 서울: 법문사, 1986.

최성빈. "북한의 방위산업 현황." 「북한연구」, 제3권 제3호 (1992 가을).

최종철. "무기이전 정책: 달러, 안보 및 영향력 확보." 최종철·신성택 외. 「북한의 생존정책」. 서울: 보성문화사, 1995.

평화연구원 편. "최고인민회의 제4기 5차회의 허담외무상 보고 (1971.4.12)." 「북한군사문제 제의 자료집(1948~1988)」. 서울: 평화연구원, 1989.

함택영. "남북한 군비경쟁 및 군사력 균형의 고찰." 함택영 외.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서울: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1992.

황진환. "북한의 군사력 건설기조와 군비통제 방향."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95~'96 북한 군사능력 평가(1)」 (1995.10).

中川八洋. "로동 1호 요격할 수 있는가." 통일원 자료조사실. 「시사정보 93~20」 (1993.10).

Brzoska, Michael. "Other Countries: The Smaller Arms Producers." in Michael Brzoska and Thomas Ohlson. eds. *Arms Production in the Third World.* London: Taylor & Francis, 1986.

Charvin, Robert. Albert Marouani. *Les Relations Internationales des Etats Socialistes.* Paris: PUF, 1981.

Kaplan, Morton A. "Unit Veto Reconsidered." in Richard Rosecrane. ed. *The Future of the International Strategic System.* San Francisco: Chandler, 1972.

Kim, Chang Ha. *The Immortal Juche Idea.* Pyongyang: Korean Workers' Party Press, 1987.

Neuman, Stephanie G. "Defense Planning in Less-Industrialized States: An Organizing Framework." Stephanie G. Neuman. ed. *Defense Planning in Less-Industrialized States.* Massachusetts: Massachusetts Lexington Books, 1984.

Olsen, Edward A. "Security Dynamics in Northeast Asia: An Evalution of North Korean Military Threat toward South Korea." 「북한의 변화전망과 대응 안보전략」. 육군사관학교 제9회 화랑대 국제 심포지엄 논문집, 1997.10.24.

Quester, George H. "The Politics of Twenty Nuclear Powers." In Richard Rosecrane. *The Future of the International Strategic System.* San Francisco: Chandler, 1972.

3. 기 타

「근로자」.

「로동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讀賣新聞」.

Jane's Defense Weekly.

最近 發刊資料 案內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著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著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著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著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著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鄭永泰 著 6,000원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硏究
金國新 著 4,000원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余仁坤
金永椿
申相振외共著 10,000원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硏究
吳承烈 著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 민 著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著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著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著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著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전성훈 著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著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김영윤
이우영 共著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著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著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著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著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외共著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著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著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헌경 著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著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著 5,500원

96-29 韓·中 安保協力方案 硏究
崔春欽 著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著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著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著 7,000원

97-04 中·北關係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著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著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
배정호
신상진
조한범외共著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
김수암 共著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著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著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著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계: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著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著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著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著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著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 민 著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著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계
정영태 著 5,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외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외共著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 송정호 共著	7,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96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6~1997	6,000원
97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7~1998	5,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97年 情勢 展望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上) 10,000원

96-02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下)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統一硏究論叢,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統一硏究論叢,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統一硏究論叢,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統一硏究論叢,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5 (1996) 6,500원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6 (1997) 9,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1) 가입방법 :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은 10만원, 학생회원은 7만원, 기관회원은 15만원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민족통일연구원)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 142-076)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전화: 901-2613, 901-2604, FAX: 901-2547)

절 취 선

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근 무 처				
	직 위			
간행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전 화		FAX	
	전자메일			
전 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일반회원 ( ) 학생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민족통일연구원의 정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본 신청서를 入金證과 함께 FAX나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FAX: 901-2547)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 (예금주: 민족통일연구원)

※ 본 연구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신청서 뒷면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